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2026. 8. 27.(목)
13:00~17:20
광주특별시청 무등홀

공동 주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2026. 8. 27.(목) 13:00~17:20
광주특별시청 무등홀

공동 주최



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회사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오입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도간 행정 통합을 이뤄낸 이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43회 인구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님과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내어주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님을 비롯한 통합특별시 관계자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좌장을 맡아주신 마강래 교수님, 김신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와 토론자분들, 그리고 지역의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포럼에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이라는 주제 아래 인구이동 및 기업 이전과 정주 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고, 무너진 인프라는 다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특히 청년의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해당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의 이동 궤적과 지역에서의 만남, 자녀 양육의 실태를 짚어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 실제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인구 이동과 기업 이동의 두 축을 함께 놓고 보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9월 10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지역 이동과 지역 간 격차 및 지역 소멸 완화가 위원회의 정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앞두고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회는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등 인구의 지역 정착 기회 확대와 지역의 정주 인프라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담고 지역 소멸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인구 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처,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처럼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의 기업과 주민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성장을 이루어 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입니다.

먼저 오늘 제43회 인구포럼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님,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하신 지역 기업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부터 인구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인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제43회 인구포럼에서는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이라는 주제 아래 인구정책의 범위를 지역 산업과 지역 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지역 인구정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원이 올해 새롭게 실시한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과 중장년의 지역 이동과 정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5,439명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학교 졸업, 첫 일자리, 결혼, 자녀 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거주 이력과 이동 경험, 그리고 일자리·주택·출산 양육·교육·의료·교통·문화 여가 등 열 개 항목에 걸친 정주 여건 만족도와 향후 이주 의향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이동과 정주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것은 이번 조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이며, 앞으로 지역 인구정책을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하는 데 든든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원의 조성호, 김은정, 최경덕 박사가 각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인구이동과 정주 실태에 대한 중요한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수도권으로 지역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전은 일 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삶을 꾸려가는 데에는 정주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 실제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이전해 온 기업의 종사자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서 살아온 기업과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지역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 주민이 정주 여건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이전도, 이전 이후의 정주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지방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결국 지역에 사람이 오게 하는 정책과 온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오늘처럼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바로 이 연결고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왜 떠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머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지역 인구정책 역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이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13:00~13:30 사전 등록

13:30~13:50 개회식

사회: 이지혜 부연구위원

개회사 김진오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축사 신영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영사 민형배 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좌장: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13:50~14:35 지역 미혼남녀의 만남

▶ 조성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육 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 김은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 최경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35~15:00 토론

▶ 박형준 교수(광주대학교)

▶ 이찬영 교수(전남대학교)

15:00~15:20 휴식

2026. 8. 27.(목) 13:00~17:20
광주특별시청 무등홀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좌장: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15:20~16:20 지역기업 현장에서 본 일자리, 인재, 정주 여건

- ▶ 이정관 본부장(전남테크노파크)

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돌봄 공백과 B2B 민간 돌봄 서비스 사례

- ▶ 정지예 대표(맘편한세상)

지역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

- ▶ 국민 패널

16:20~17:00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 윤동열 교수(건국대학교)
- ▶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 김지수 연구위원(산업연구원)
- ▶ 고제이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00~17:20 폐회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좌장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발표

지역 미혼 남녀의 만남

- ▶ 조성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육 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 ▶ 김은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 ▶ 최경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 ▶ 박형준 교수(광주대학교)
- ▶ 이찬영 교수(전남대학교)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발제 1

지역 미혼남녀의 만남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3회 인구포럼
2026년 8월 27일(목) 13:50~15:00
세션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지역 미혼남녀의 만남

조성호 연구위원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불균형한 결혼시장

PAR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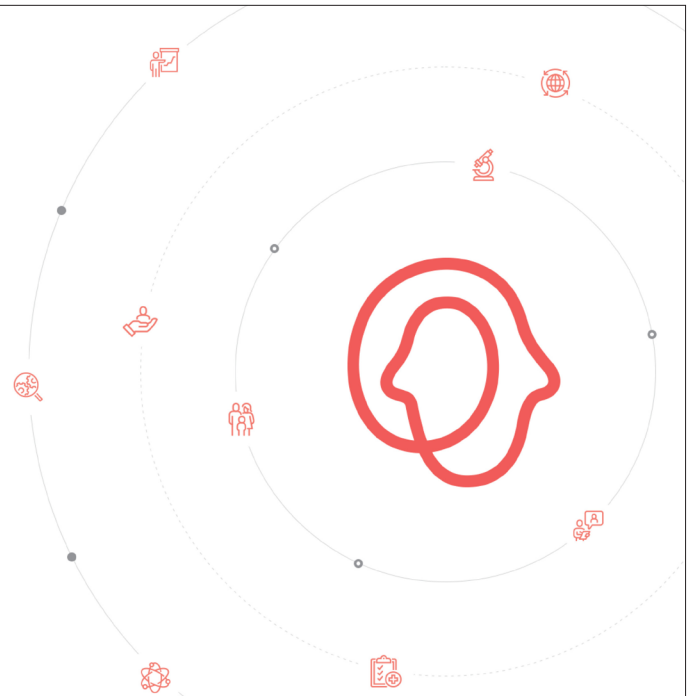
미혼남녀의 만남 현황

PART.3

결혼 의향과 지역 이탈

PART.4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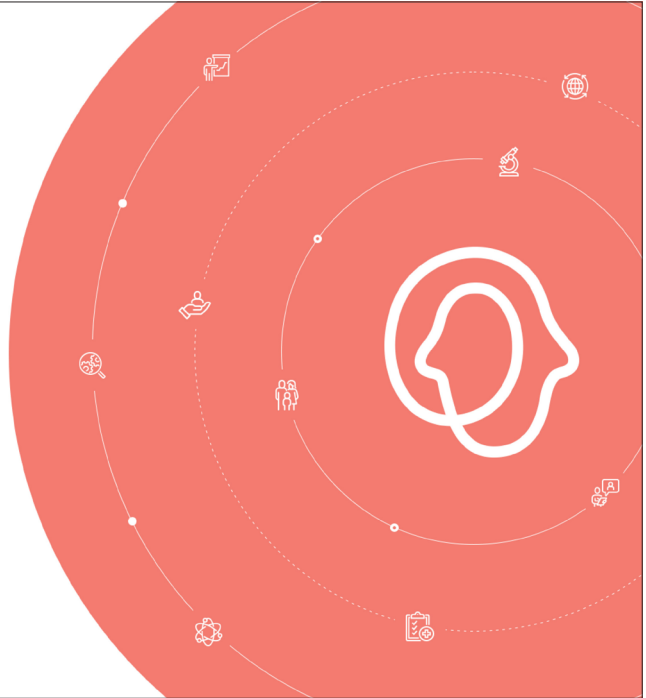


PART.1

불균형한 결혼시장

01 | 미혼·비혼화 및 결혼 성비의 불균형 현황

02 | 결혼시장의 구조적인 불균형(Marriage Squeeze) 현황



PART.1 불균형한 결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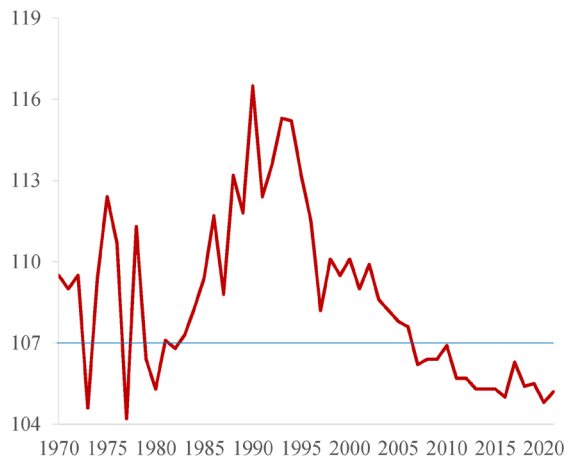
01. 미혼·비혼화 및 결혼 성비의 불균형 현황

한국의 미혼 인구 비율 추이: 1990~2020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성	20 - 24세	96.4	96.3	97.5	98.2	98.8	98.8	99.2
	25 - 29세	57.3	64.4	71.0	81.8	85.4	90.0	92.2
	30 - 34세	13.9	19.4	28.1	41.3	50.2	55.8	65.9
	35 - 39세	3.8	6.6	10.6	18.4	26.7	33.0	37.8
	40 - 44세	1.5	2.7	4.9	8.5	14.4	22.5	27.2
	45 - 49세	0.8	1.3	2.4	4.5	7.5	13.9	20.5
여성	20 - 24세	80.5	83.3	89.1	93.7	96.0	96.8	98.0
	25 - 29세	22.1	29.6	40.1	59.1	69.3	77.3	82.0
	30 - 34세	5.3	6.7	10.7	19.0	29.1	37.5	46.0
	35 - 39세	2.4	3.3	4.3	7.6	12.6	19.2	23.3
	40 - 44세	1.1	1.9	2.6	3.6	6.2	11.3	14.7
	45 - 49세	0.6	1.0	1.7	2.4	3.3	6.4	9.8

자료: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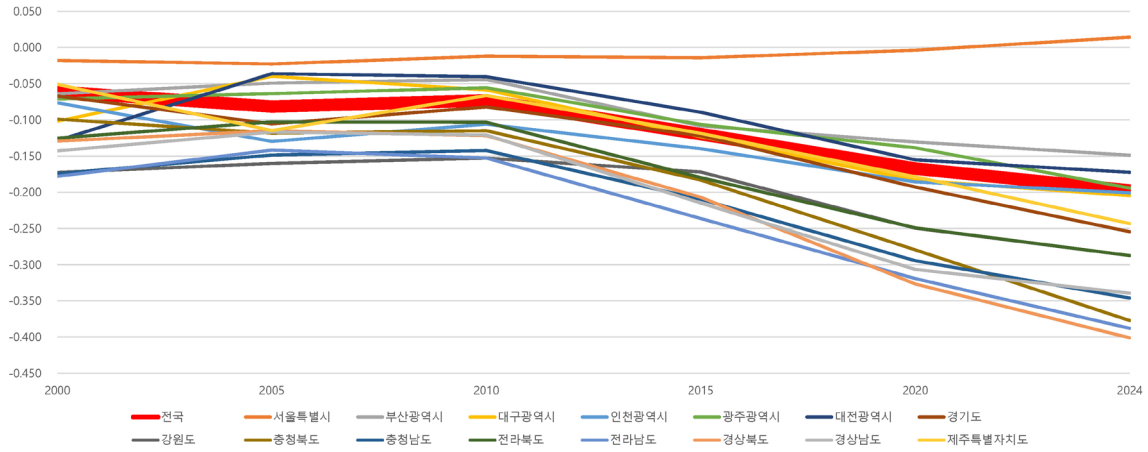
한국의 출생성비 추이: 1970~2021년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연도별 출생성비

02. 결혼시장의 구조적인 불균형(Marriage Squeeze)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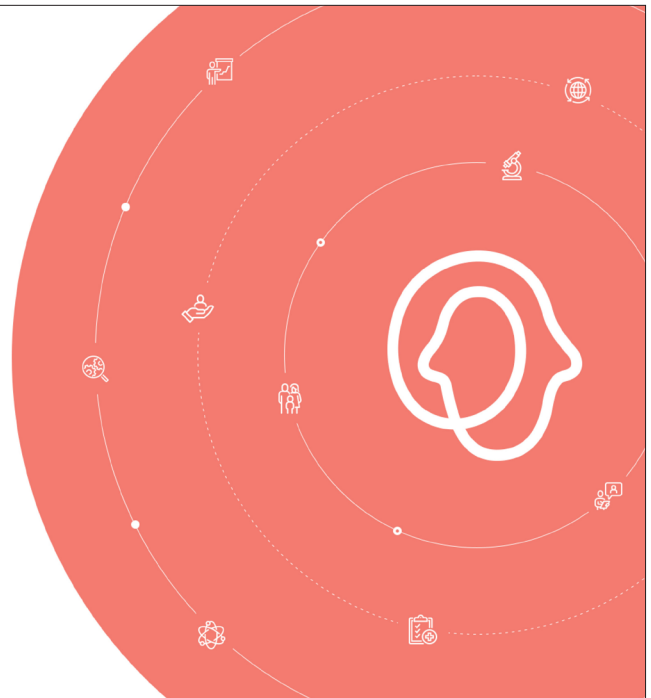
한국의 결혼 압박 지수(S 지표) 추이: 2000~2024년



PAR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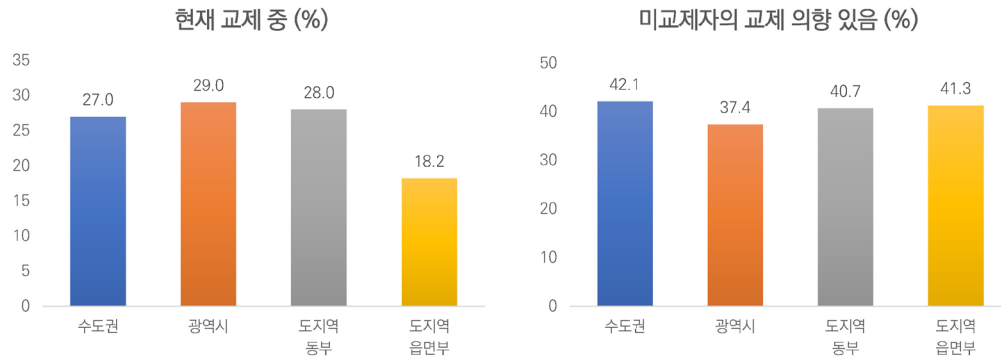
미혼남녀의 만남 현황

- 01 | 이성교제 비율
- 02 | 만남 경로
- 03 | 교제 상대와의 거리(만남권)
- 04 | 이성교제 비율의 성별 비교
- 05 | 이동 이력과 교제-결혼 의향



01. 이성교제 비율

도지역 읍면부 교제율 낮지만, 교제 의향 지역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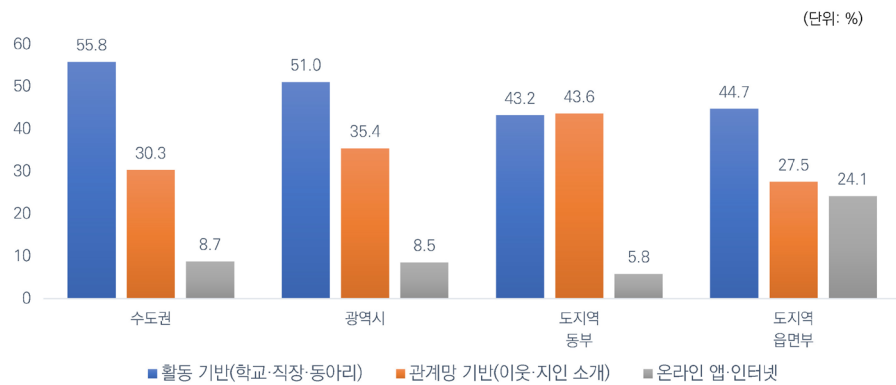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 읍면부 18.2% vs 그 외 지역 27.6%, 격차 9.4%p, 격차는 19~34세에서 최대
- 미교제자의 교제 의향은 37~42%로 지역 차 없음 → 의지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

02. 만남 경로

학교·직장 기반 '활동형 만남' 수도권 56% → 도지역 43% 하락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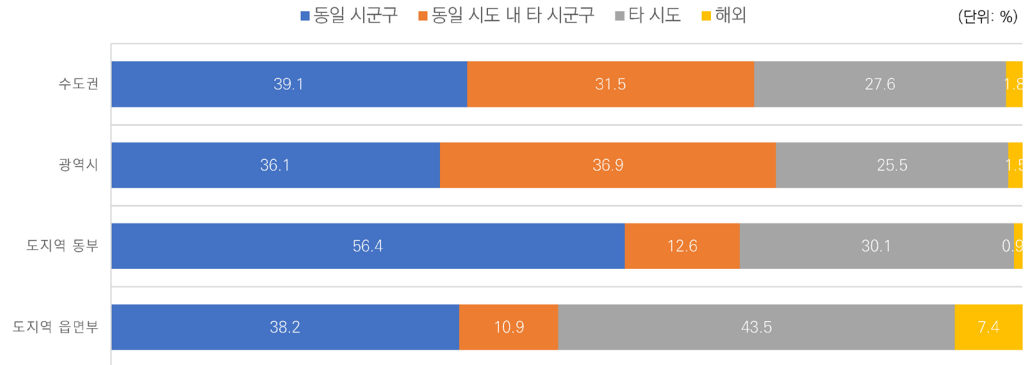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 도지역 동부는 이웃·지인 소개(43.6%)가 이를 대체함 → 관계망 의존형 만남 구조
- 읍면부는 온라인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경향(7/28)

03. 교제 상대와의 거리(만남권)

도지역 동부 만남권 대부분 시군 범위 안, 시도 내 확장 12.6% vs 대도시권 3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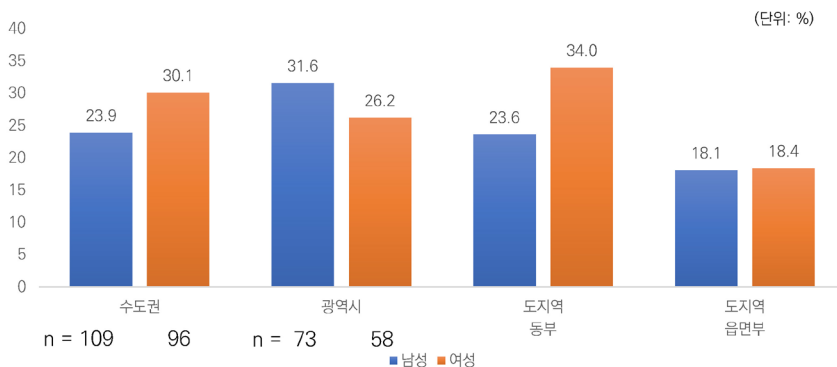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 도지역의 교제 열 쌍 중 다섯 쌍은 같은 시군 안, 이웃 시군에 상대를 둔 커플은 한 쌍뿐, 나머지는 시도 밖(절반 가까이는 수도권)
⇒ 대도시권은 통합된 만남권, 도 지역은 시군 단위로 분절
- 읍면부 교제자 28명 중 14명은 상대가 타 시도·해외 → 지역 내 시장만으로 지탱되지 않는 교제
- 온라인 경로의 역외 교제 46.4%로 대면 경로(27~28%)의 1.7배

04. 이성교제 비율의 성별 비교

남초가 뚜렷한 도지역 동부: 남성 교제율 23.6% vs 여성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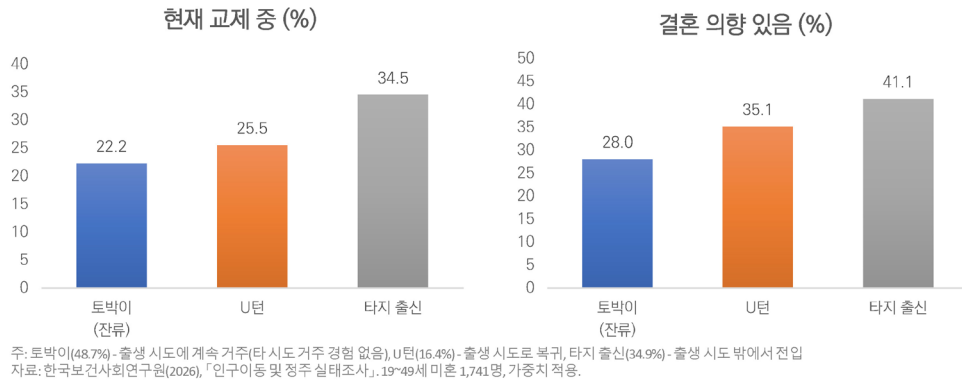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 다른 지역에서는 유의한 성별 격차가 없음
 - 수도권·광역시에는 교제 중인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데, 남는 남성이 지역 밖에서 상대를 찾아 성비를 상쇄
- 도지역 동부는 만남권이 닫혀 있어 성비 불균형이 상쇄 없이 남성의 낮은 교제율로 이어짐

05. 이동 이력과 교제·결혼 의향

지방 미혼의 절반은 '토박이(잔류)', 그리고 이들의 교제율·결혼 의향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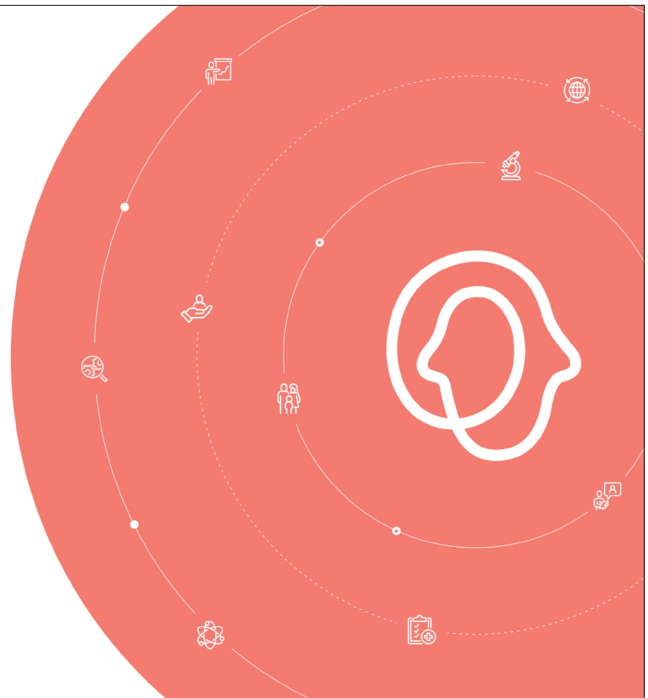


- 비수도권 미혼 구성: 토박이(잔류) 48.7% · U턴 16.4% · 타지 출신 34.9%, 교제율과 결혼 의향 모두 토박이(잔류)가 최저
- 연령·성·지역 통제 후, 타지 출신 미혼의 교제 odds는 토박이(잔류)의 약 2배(OR 1.97, $p < 0.001$). 단, 인과 방향은 선택 효과 가능성

PART.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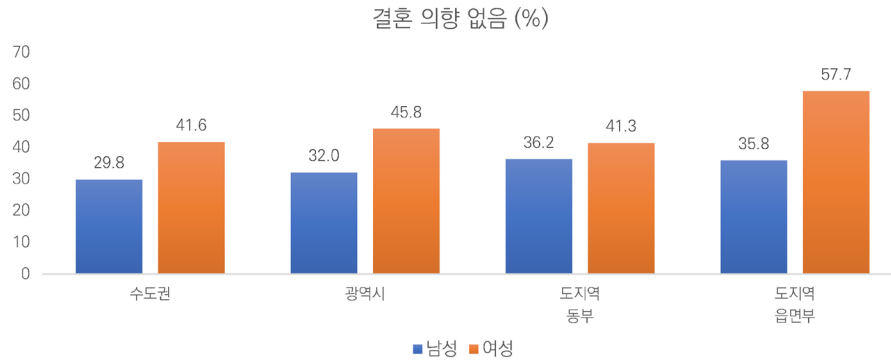
결혼 의향과 지역 이탈

- 01 | 결혼 의향의 지역 격차
- 02 |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성별 차이
- 03 | 결혼 교제와 정주의 탈동조화



01. 결혼 의향의 지역 격차

‘의향 없음’ 수도권 36% → 읍면부 46%, 그 정점에 읍면부 여성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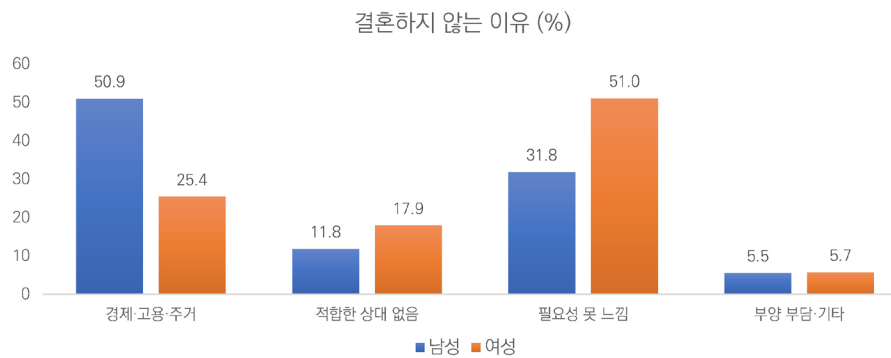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 남성은 지역 차 없음($p=0.323$) · 읍면부 여성은 타 지역 여성(42.4%) 대비 15.3%p 높음.
- 남초 지역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여성의 결혼 이탈이 가장 높음

02.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성별 차이

남성은 경제·고용·주거(50.9%), 여성은 ‘필요성을 못 느낌’(51.0%)이 최다
= ‘못’하는 결혼 = ‘안’하는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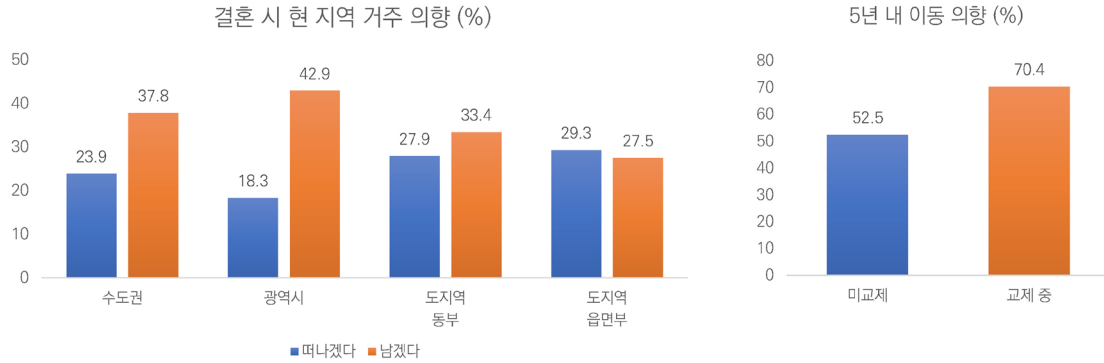


* 주: 결혼 의향 없는 미혼($n=656$), 1순위 응답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 ‘지역 내 만남 기회 부족’ 1순위 응답은 0.6%뿐 → 만남의 공백은 말이 아니라 행동(낮은 교제율)으로 드러남

03. 결혼·교제와 정주의 탈동조화

읍면부는 결혼 시 '남겠다' 27.5%로 최저 → 교제자의 이동 의향은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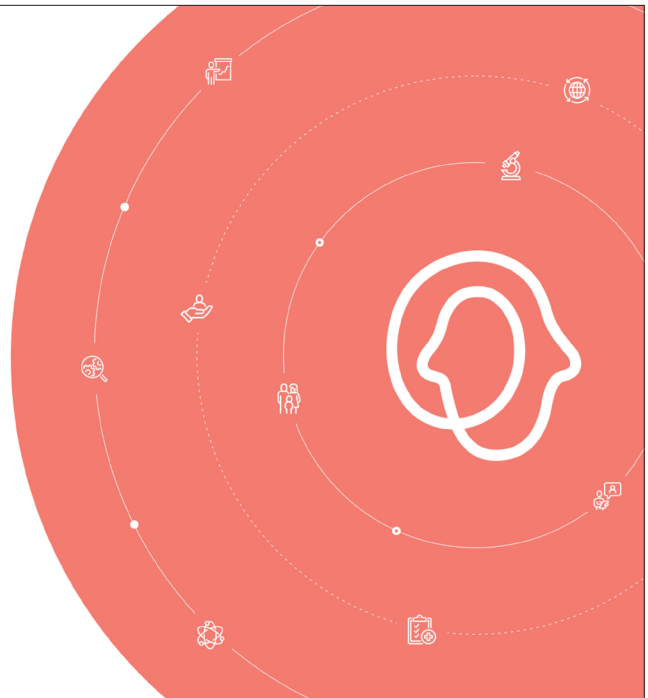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 연령·성·지역을 통제해도 교제자의 이동 의향은 약 2배(OR 2.07, $p < 0.001$): 교제·결혼의 성사는 이동의 예고
- 만남·결혼 지원이 성공해도, 그 자체로는 지역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PART.4

정책적 시사점

- 01 | 만남 지원의 구조적 한계
- 02 | 정착의 본질
- 03 | 세 갈래 정책 제언



01. 만남 지원의 구조적 한계

성비는 단기 정책으로 바꿀 수 없고, 만남의 성사는 지역 이탈로 이어질 것

① 구조 제약

결혼시장 성비는 출생성비 불균형과 인구이동이 누적된 결과 → 단기 반전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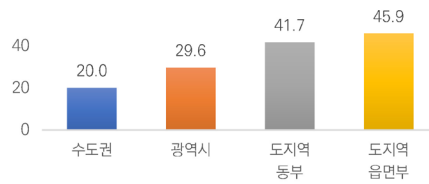
② 성사의 역설

교제·결혼 성사 시 이동 의향 상승 → 만남 사업 단독은 정주 정책이 아님

③ 여건 격차

만남이 일어날 문화·여가 여건 '부족' 인식: 수도권 20% vs 읍면부 46%

문화·여가·쇼핑 여건 '부족'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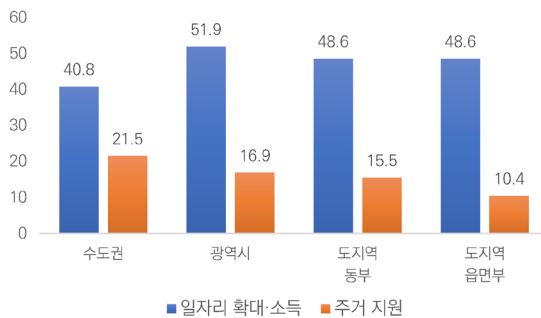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02. 정착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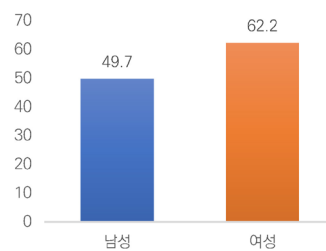
정착 1순위는 전 지역에서 일자리(41~52%) ↔ 여성 유치의 지렛대는 원격근무

정착에 필요한 정책 1순위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19~49세 미혼 1,741명, 가중치 적용.

원격근무 시 이주 효과 인식 (%)



- 수도권 미혼의 지방 이주 유인: 안정적 일자리 64.8% · 소득 유지 63.7% · 광역교통 63.2% · 주거비 60.6%
- 원격·유연근무의 효과 인식은 여성 62.2% vs 남성 49.7% — 11개 유인 중 성별 격차 최대(12.6%p)

03. 세 갈래 정책 제언

만남의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지역의 기회 구조

① 청년 여성의 정착 기반

일자리의 질, 원격근무 기반, 문화 어메니티 등 여성이 남고 유입될 조건을 우선 정비

② 만남 시장·인프라의 광역화

'시군을 넘는 비용' 낮추기 → 생활권 단위의 교통·거점 중심 만남 기회 설계

③ 정주 패키지와의 결합

만남 지원은 주거·일자리 연계형으로
→ 성사 이후의 정착까지 함께 설계

감사합니다

NOTE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발제 2

**양육 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육가구 주거이동과 양육환경

- 출산전 후 이동, 양육환경, 정주의향을 중심으로

| 일시: 2026.8.27.(목) 13:00~17:20

| 장소: 광주광역시 무등홀

김은정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출산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Part.2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Part.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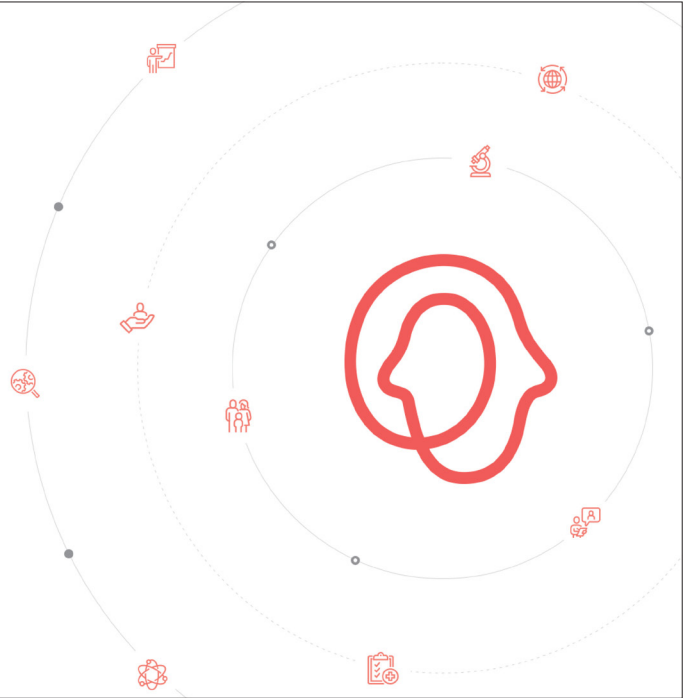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Part.4

정책 수요 및 제언

Part.1

출산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01. 연구 배경 및 분석 개요

분석배경

: 주거이동의 패러다임 변화, **자산가치나 직장위주의 이동 + 양육환경의 결합**

양육 친화적 정주 여건이 주거이동의 주요 요건으로 작동

- 3040 세대의 주요 주거 이동 사유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넓은 집으로 이사**' 와 '**자녀 교육 환경**'
- 초등 진학 시점 **학군지 인구 유입** 집중
- 맞벌이 가구 증가로 **친정/시댁 근처로 이사**

연구목적

- : 양육 가구 주거이동에 대한 이해 확대
- 양육 가구의 **출산 전, 후 이동**은 어떠한가?
- 현재의 **양육 인프라 만족도**는 어떠한가?
- 환경 만족도가 **정주와 추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01. 연구 배경 및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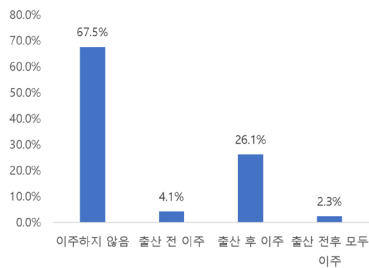
분석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2026년 7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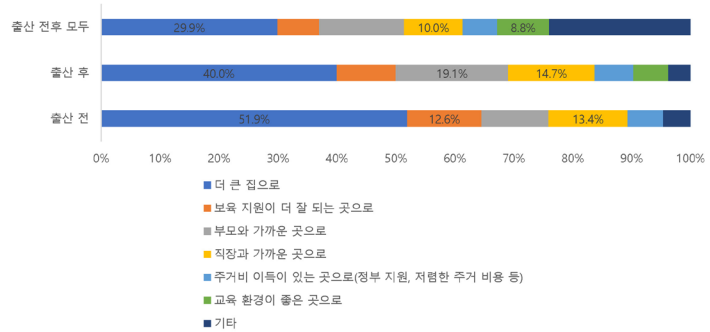
분석대상 : 가구내 **막내자녀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응답자 (1,467명)**

02 출산 전후 주거 이동

출산전후 2년 이내 주거이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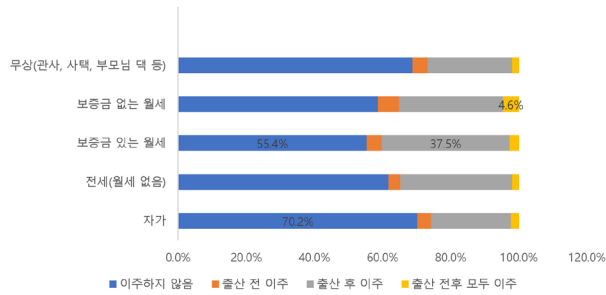


출산전후 주거이동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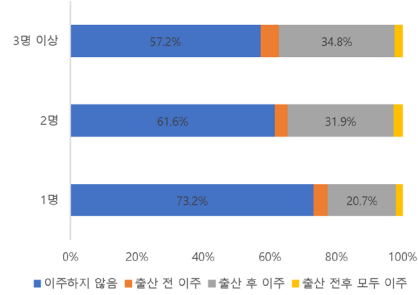


02 출산 전후 주거 이동

주택유형에 따른 출산전후 주거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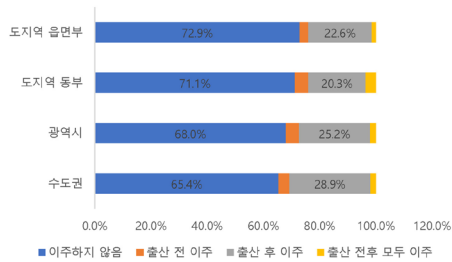
자녀수에 따른 출산전후 주거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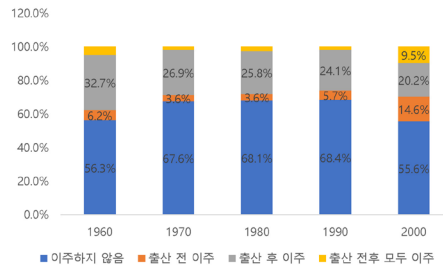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산건강사업 안내(수정), p.6.

02 출산 전후 주거 이동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전후 주거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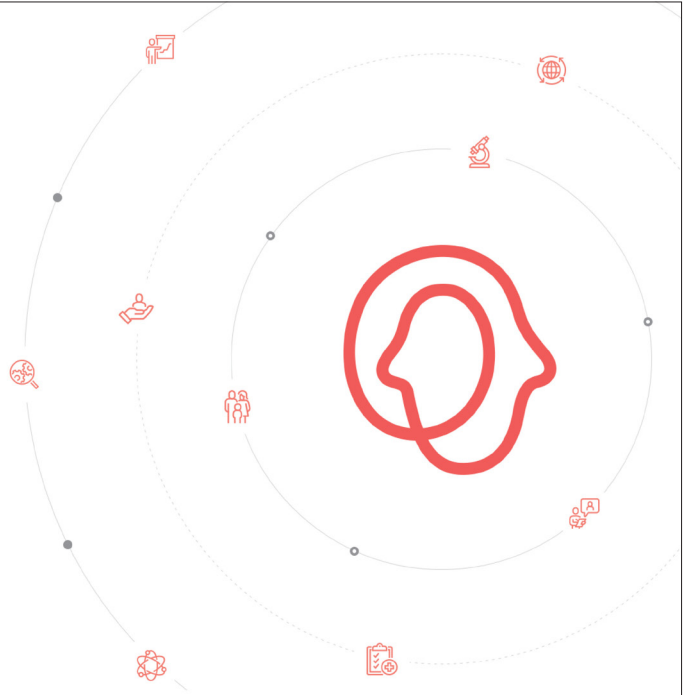


출생코호트별에 따른 출산전후 주거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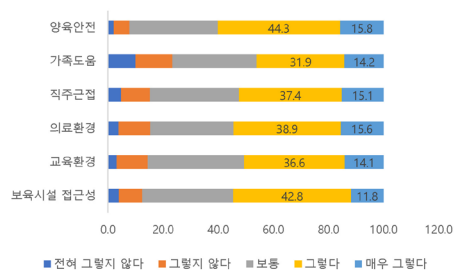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산건강사업 안내(수정), p.6.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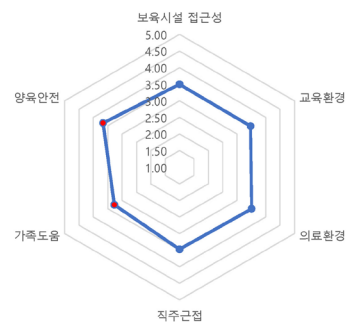


01 양육환경 만족도

✓ 양육환경 만족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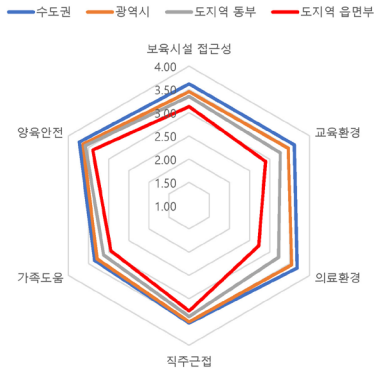


✓ 양육환경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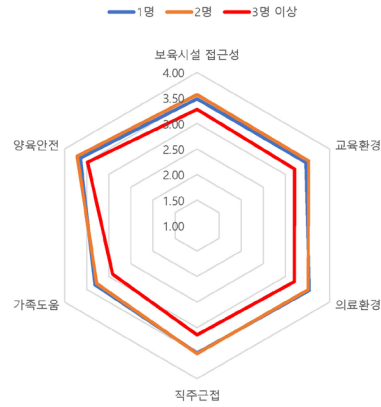


01 양육환경 만족도

지역에 따른 양육환경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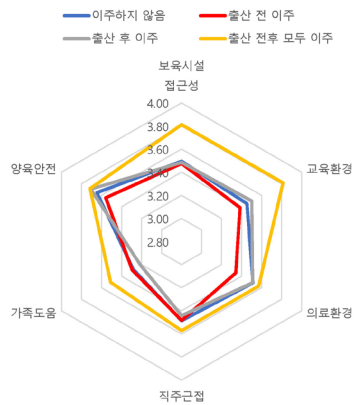
자녀수에 따른 양육환경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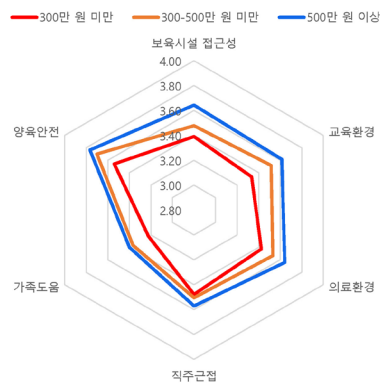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산건강사업 안내(수정), p.6.

01 양육환경 만족도

이주시기에 따른 양육환경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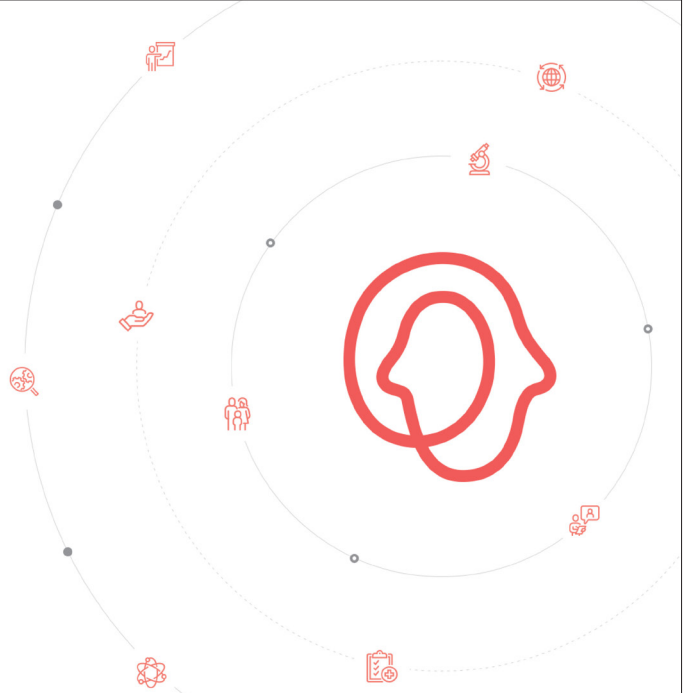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환경 만족도 평균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산건강사업 안내(수정),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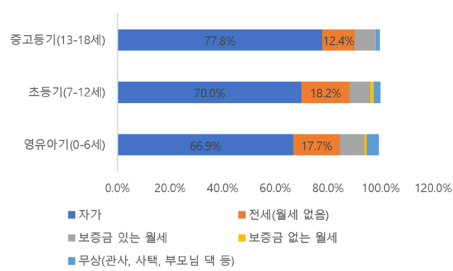
Part.3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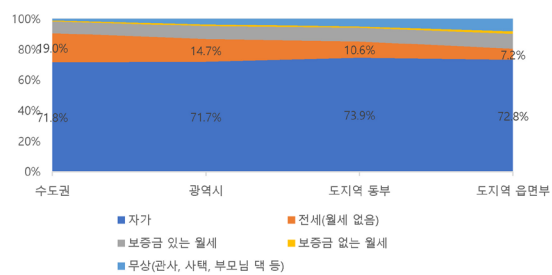


01 주택점유 유형

자녀 연령별 주택점유 유형



지역별 주택점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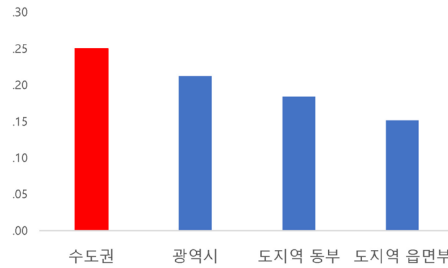


02 정주환경과 양육환경 격차

지역별 정주환경과 양육환경 격차



지역별 정주환경과 양육환경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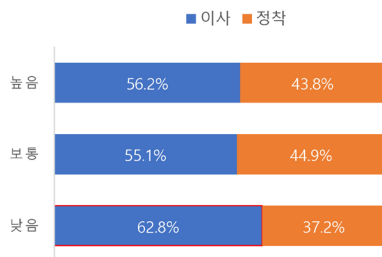


수도권 양육환경(3.59) 정주환경(3.34) 가장 높음, 양육인프라 체감도 높음
읍면부 양육환경, 생활환경 인식 격차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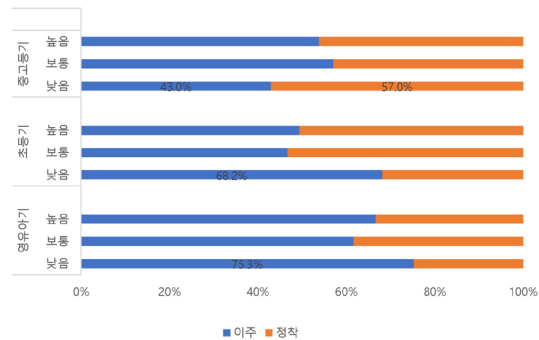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산건강사업 안내(수정), p.6.

03 양육환경 만족도와 정주 의향

양육환경 만족도와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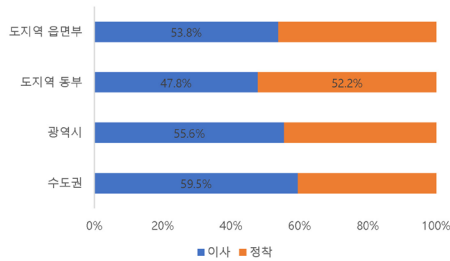
자녀 연령별 양육환경과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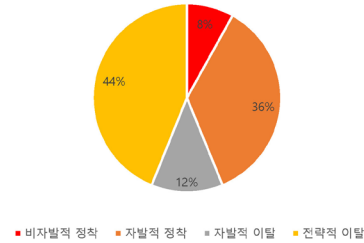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산건강사업 안내(수정), p.6.

03 양육환경 만족도와 정주 의향

지역별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



양육환경과 정주 의향에 따른 정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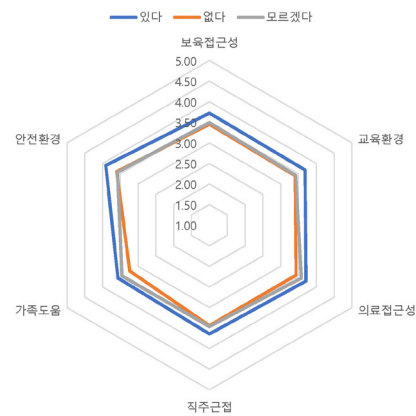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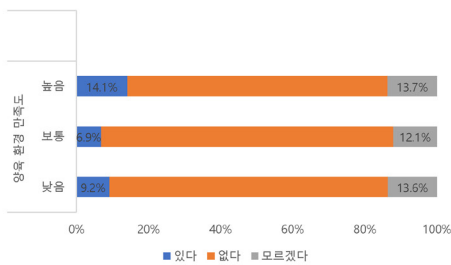


비자발적 정착: 양육환경 만족도 낮으나 남아있는 집단
자발적 정착: 양육환경 만족도 높고, 계속 거주 희망
자발적 이탈: 양육환경 만족도 낮고, 이동을 계획
전략적 이탈: 양육환경 만족도 높으나, 이동 계획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수정),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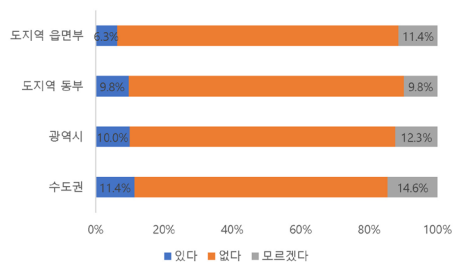
04 추가 출산 의향

양육환경 만족도와 추가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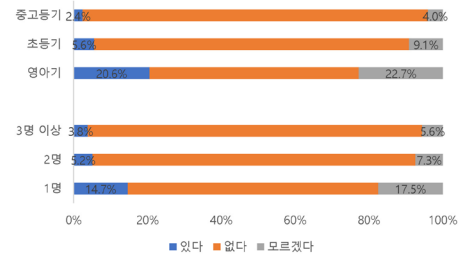


04 추가 출산 의향

지역에 따른 추가출산 의향



자녀연령, 자녀수와 추가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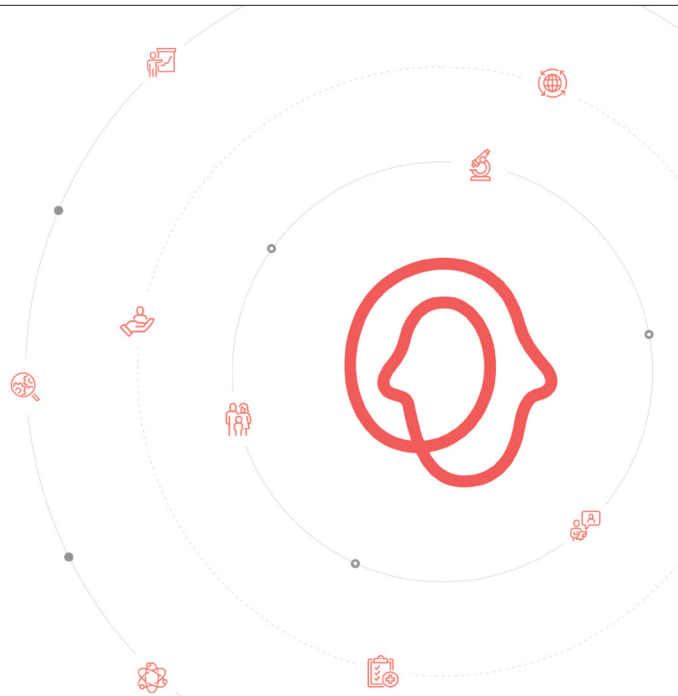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산건강사업 안내(수정), p.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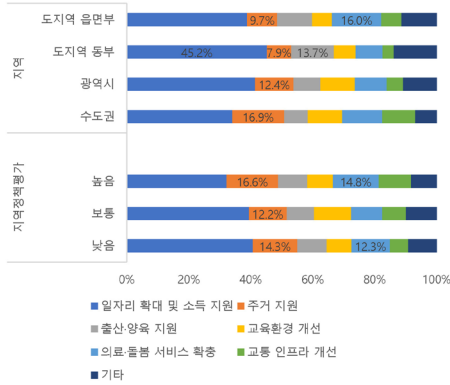
Part 4

정책수요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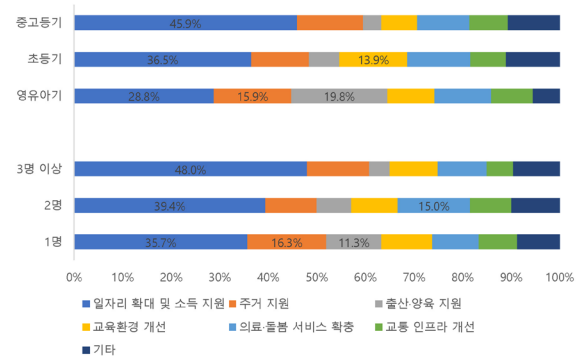


01 정책수요

지역 정책평가 수준에 따른 정책수요



자녀연령, 자녀수에 따른 정책수요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수정), p.6.

02 제언

1. 주거 이동 동기에 따른 맞춤 지원

: 출산 후 '가족지원(부모근처)' 및 '시간확보(직주근접)'로 이동의 동기 지원

: 조부모의 육아 조력을 돕는 '3세대 근접 거주' 지원 등 가족 지원망 확보를 돕는 실질적 대책 필요

2. 지역간 양육인프라 격차 해소

: 수도권에 집중된 '양육 프리미엄' 을 지방으로 분산 필요

- 읍면부의 의료·보육 인프라 우선 확충

3. 정주 안정성 강화 및 추가 출산 동력 확보

: '영유아기' 가구의 돌봄, 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 양육환경이 출산 의향과 직결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개선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수정), p.6.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발제 3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경덕 부연구위원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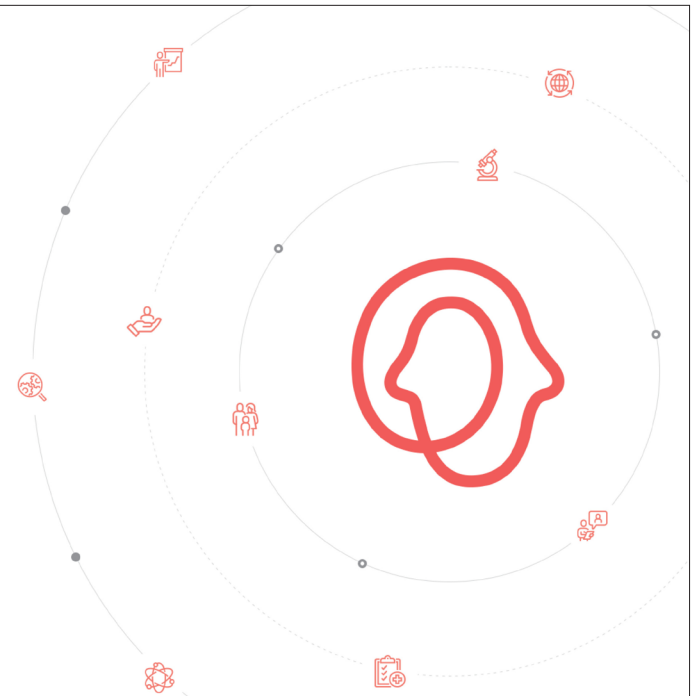
중장년층의 정주여건과 은퇴 후 거주 선호

Par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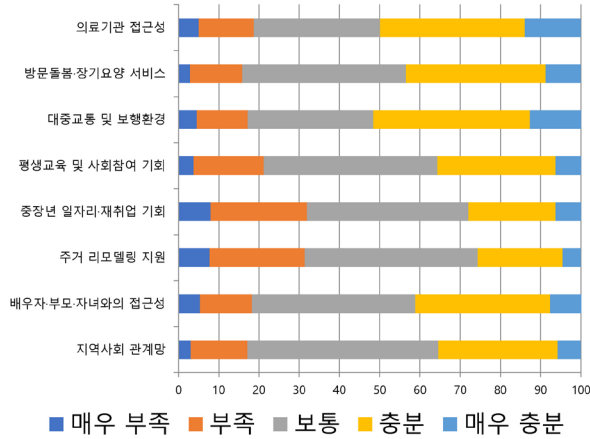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Part.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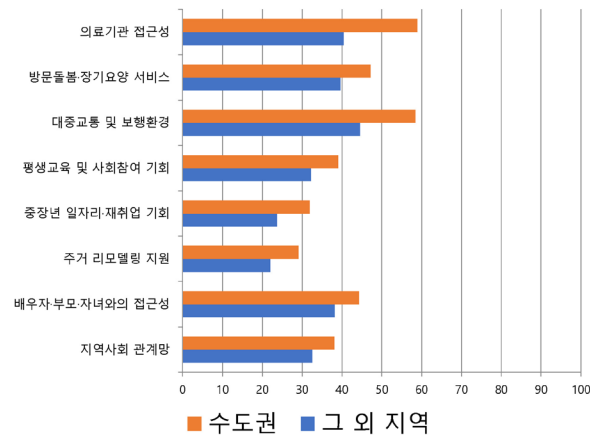
현재 지역의 정주여건, 영역별 평가는 상이



-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51.6%), 의료기관 접근성(49.8%) → 상대적으로 높은 충분성 평가
- 주거 리모델링 지원(25.5%), 중장년 일자리·재취업 기회(27.9%) → 상대적으로 낮은 충분성 평가
- 8개 중 6개 영역에서 '충분 이상' 응답 비율이 '부족 이하' 응답 비율보다 높음

▶ 전반적으로 '충분 이상' 응답 비율이 '부족 이하' 응답 비율보다 높으나, 일자리·주거지원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

정주여건 평가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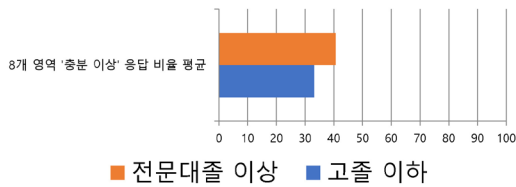


- 8개 항목 모두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5.6~18.5%p
- 항목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5.6~18.5%p
- 의료기관 접근성(18.5%p),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13.9%p)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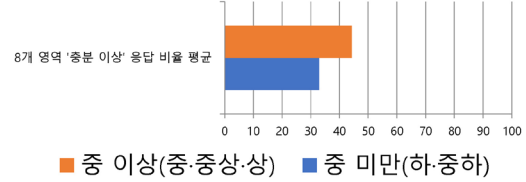
▶ 모든 정주여건에서 수도권의 '충분 이상' 응답 비율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남

정주여건 평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도 연결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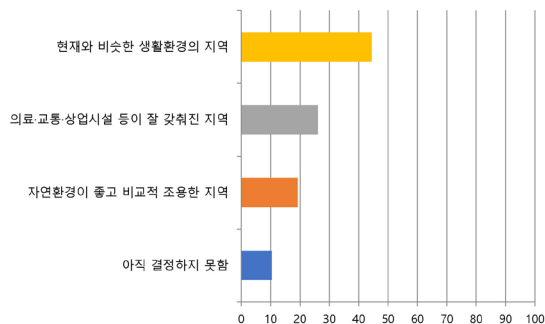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8개 영역 모두에서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충분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8개 영역 '충분 이상' 응답 비율 평균은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7.5%p 높음
- 8개 영역 모두에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중 이상' 집단의 충분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8개 영역 '충분 이상' 응답 비율 평균은 '중 이상'에서 '중 미만'보다 11.5%p 높음
- 실제 거주환경의 차이 또는 지역의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여건의 차이가 평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 지역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처감 정주여건의 차이도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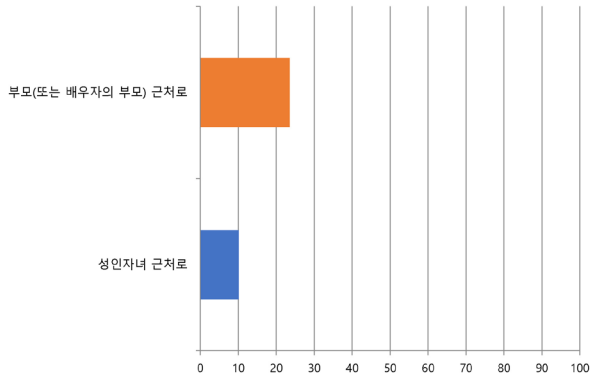
은퇴 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 선호가 가장 큼



- 전체의 44.4%가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지역' 희망
- 여성: 의료·교통·상업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선호
- 남성: 자연환경이 좋고 비교적 조용한 지역 선호
- 50~64세: 40~49세보다 자연환경이 좋고 비교적 조용한 지역 선호
- 40~49세: 아직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중 이상':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 선호

▶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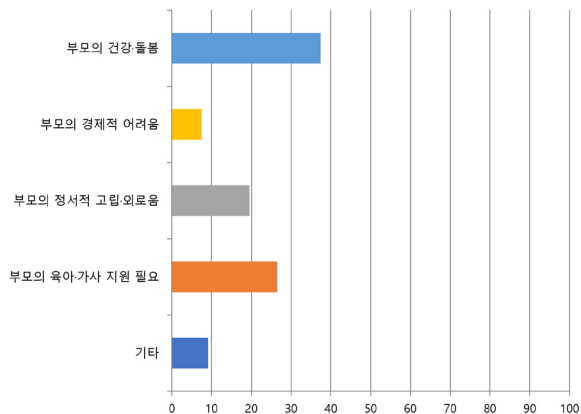
가족 관련 이동 경험은 자녀보다 부모 근처로의 이동에서 더 많음



- 부모 근처로의 이동 경험은 23.5%, 성인자녀 근처로의 이동 경험은 10.1%
- 부모 근처로의 이동 경험: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적음
- 성인자녀 근처로의 이동 경험: 고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그 외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 없음

▶ 가족 관련 이동 경험은 성인자녀보다 부모 근처로의 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음

부모 근처로의 이동에는 '지원하기'와 '지원받기'가 모두 나타남



- 부모의 건강·돌봄을 위한 이동이 37.4%로 가장 높은 비중
- 부모로부터 육아·가사 지원을 받기 위한 이동은 26.5%, 부모의 정서적 고립·외로움에 따른 이동은 19.5%
-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과 부모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이동이 모두 나타남

▶ 부모와의 근접 거주는 '부모 부양'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

부모 근처로의 이동은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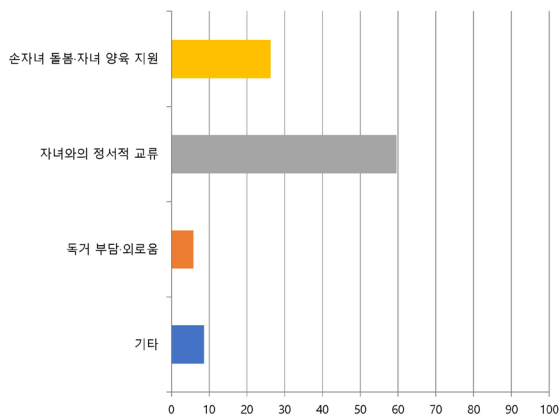
- 부모의 건강·돌봄: 40~49세 31.2%, 50~64세 40.8%
-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40~49세 10.7%, 50~64세 5.8%
- 부모의 육아·가사 지원 필요: 40~49세 29.5%, 50~64세 24.8%
- 연령에 따라 부모 근처로 이동한 이유 상이

학력

- 부모의 건강·돌봄: 전문대졸 이상 35.1%, 고졸 이하 44.0%
-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전문대졸 이상 5.1%, 고졸 이하 14.7%
- 부모의 육아·가사 지원 필요: 전문대졸 이상 30.4%, 고졸 이하 14.8%
- 학력에 따라 부모 근처로 이동한 이유 상이

▶ 부모 근처로 이동한 이유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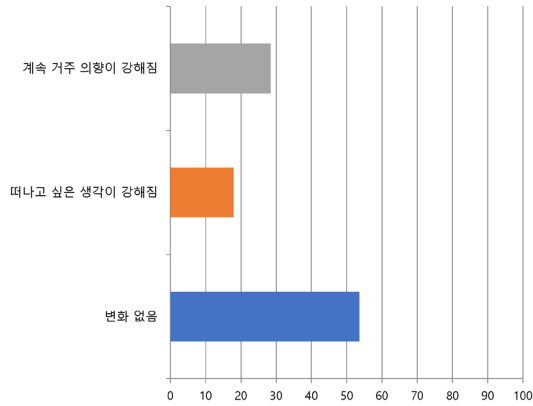
자녀 근처로 이동한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교류'



-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가 59.5%로 가장 큰 이동 이유
- 손자녀 돌봄·자녀 양육 지원이 26.2%로 뒤를 이음
- 지역·성별·연령·학력·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부모 근처로의 이동에 비해 자녀 근처로의 이동에서는 정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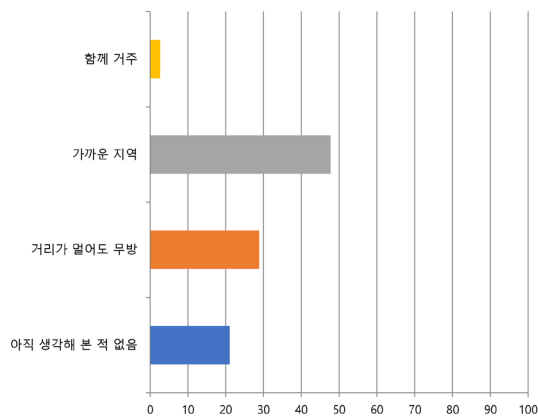
자녀의 독립이 곧 현재 지역을 떠나려는 의향으로 이어지지 않음



- 자녀 독립 이후에도 거주지역에 대한 생각에 '변화 없음'이 53.6%로 가장 높음
- 계속 거주 의향 강화(28.4%)가 떠나고 싶은 생각 강화(17.9%)보다 높음
- 여성: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남성: 변화 없음·계속 거주 의향 강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 독립 이후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생각은 '변화 없음'이 과반

노후에 자녀와는 '함께 거주'보다 '가까운 지역' 거주 선호



- 자녀와 함께 거주하려는 선호는 2.6%로 매우 낮음
-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려는 선호가 47.7%로 가장 높음
- 거리가 멀어도 무방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음

▶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일정한 물리적 근접성을 확보하려는 거주 선호가 두드러짐

자녀와의 적정 거리에 대한 선호는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

지역

- 수도권: '가까운 지역' 선호가 비수도권에 비해 10%p 이상 높음
- 비수도권: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에 따라 '가까운 지역' 선호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응답에서 상반된 양상

성별

- 여성: 자녀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남성 대비 약 10%p 높음)
- 남성: 거리가 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여성 대비 약 10%p 높음)
- 여성이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

▶ 동거 선호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얼마나 가까이 살 것인가'에는 집단적 차이가 존재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정주여건의 충분성 인식에는 격차가 존재

- 수도권에서 모든 정주여건의 충분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력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일관된 차이
- 중장년층의 정주여건을 살필 때 지역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체감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은퇴가 곧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음

- 은퇴 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지역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중장년층의 노후 거주를 이주 중심에서뿐 아니라 현재 생활환경과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

✓ 가족 근접이동은 일방향적인 부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부모의 건강·돌봄을 위한 이동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육아·가사 지원을 받기 위한 이동이 나타남
- 가족과의 근접 거주를 '부모 부양'이라는 단일한 틀보다 세대 간 지원이 오가는 다양한 관계로 볼 필요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자녀와의 동거보다 적절한 거리가 중요

-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선호는 매우 낮은 반면, 가까운 지역에서의 거주 선호가 가장 높음
- 노후의 가족관계를 동거 여부만으로 보기보다 독립된 거주와 가족 간 물리적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은 현재의 생활기반,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 생애단계에 따른 가족관계 및 거주 선호와 복합적으로 연결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감사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E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토론 1

**토론문 : 사람이 오는 이유와
머무는 조건**

박형준

광주대학교 교수

1. 생애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머무는 조건'

세 발표는 청년·미혼층, 출산·양육 가구,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지역에 머무르거나 떠나는 이유는 생애 단계에 따라 다르고, 머무름에 있어 필요한 조건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1 발표에서 미혼남녀의 교제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제 의향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경로도 달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학교·직장·동아리를 통한 만남이 상대적으로 많고, 도지역에서는 이러한 만남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교제 상대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제와 결혼이 현재 지역에서의 정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제 중인 사람의 이동 의향이 더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발표는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과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청년에게는 만남 자체보다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이후의 생활을 이어갈 조건까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 발표에서는 출산 전후 주거 이동을 한 경우 출산 전에 비해 출산 후 이동이 더 많았고, 이동의 이유로 주택, 부모와의 거리, 직주 근접, 보육·교육환경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양육 환경에 만족한다고 모두 머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족하면서 떠나려는 집단이 있고, 만족하지 않으면서 남아 있는 집단도 있습니다. 발표 자료의 요지를 양육 가구의 정주는 보육이나 교육환경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출산·양육기에서 머무는 이유에는 주거, 직장, 부모의 도움을 포함한 생활 조건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발표에서는 중장년층의 정주가 현재의 생활 기반, 의료·교통·일자리 등 지역의 여건, 부모와 자녀의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생활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따로 살고 싶다는 선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장년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발표의 내용을 생애 단계별로 놓고 거칠게 표현하자면 청년기에는 일자리와 만남, 문화와 생활 기반이 중요하고, 출산·양육기에는 주거·보육·교육·직장·가족 지원이 중요합니다. 중장년기에는 의료·교통·일자리, 부모와 자녀의 거리, 기존 생활 기반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머무는 조건을 고려할 때 생애 단계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세 발표를 함께 놓고 볼 때 먼저 읽혔습니다.

2. '지역의 차이'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차이'

다만 발표에서 제시된 지역 차이를 보면서 다른 질문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현상의 어디까지가 정말 지역 자체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디까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인지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현상(차이)이 어느 정도는 계층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배경으로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동부, 읍면부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같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학력, 소득, 직업 지위, 고용 형태, 사업체 규모, 주거 자산의 분포가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별 평균의 차이에는 지역의 인프라 차이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계층적 구성 차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성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 발표에서 학교·직장·동아리를 통한 활동 기반 만남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지역마다 만남의 기회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직장을 통한 만남은 그 지역의 산업과 직업 구조와 떨어뜨려 보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사

업체, 대학, 공공기관, 전문직 사업장에서는 비슷한 연령과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직장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힐 가능성도 큼니다. 반대로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 농림어업 등이 많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접촉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단순히 '도지역에는 만남의 장소가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직업 구조가 사람을 만나는 기회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토박이, U턴, 타지 출신 사이의 교제율과 결혼 의향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갔다가 안정적인 일자리나 전문직을 가지고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과 지역에서 계속 학업과 취업을 이어온 사람은 '이동 이력'만 다른 집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력, 직업 지위, 소득, 사회관계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박이와 U턴·타지 출신 간의 차이에 계층적 차이가 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발표에서도 선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의 주관적으로 응답한 양육 환경의 차이가 모두 지역의 인프라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보육시설과 병원, 학교가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조건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경제력이 있는 가구는 좋은 학군이나 직장에 가까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생활권을 넓힐 수도 있고,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면 민간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옮기거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소득과 자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동네마다 누리는 인프라와 접근성이 다를 수 있고, 동네 단위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 역시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양육환경 만족의 차이는 지역 인프라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어떤 경제력을 가진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1-3 발표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수도권의 정주환경 평가가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같은 발표에서 학력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정주환경 평가가 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 평가가 다른 것인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분포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자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볼 때 소득, 학력, 직업 지위,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한 뒤에도 차이가 얼마나 남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조사된 원 자료를 8월에 발표하는 일정에서 이러한 작업까지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후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효과와 구성 효과를 분리하여 파악하면 지역에 의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지역에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인구 이동의 결과

지역 차이 중 상당 부분이 구성 효과라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지역 정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왜 어떤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은 특정 지역에 많이 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지역별 인구 구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이동하고, 취업을 위해 이동하고, 더 나은 임금과 직업을 찾아 이동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는 주택과 교육환경을 찾아 다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동이 누적되어 지금의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와 읍면부의 인구 구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구 문제를 볼 때는 두 질문을 같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지역에 오는가?", 두 번째는 "왔으면 왜 계속 머무는가?" 일 것입니다.

세 발표를 통해 청년, 양육 가구,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정주 조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질문도 같

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주목하면 사람들이 애초에 왜 이 지역을 선택했기에 지역별로 계층적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오는 이유'와 '머무는 조건'을 같이 볼 필요

세 발표에서 다루는 주거, 보육, 교육, 돌봄, 교통, 문화, 의료는 대부분 이미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계속 생활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머무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인구 구성을 바꾸려면 먼저 '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활동 연령층을 생각하면 산업과 고용을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산업이 있는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 지역에서 직업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일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발표에서도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1-1 발표에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1-3에서도 중장년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발표의 내용을 길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업·고용 기반(오는 이유) → 경제활동인구 유입 → 지역의 계층·직업구성 변화 → 가족 형성과 생애 단계의 변화 → 주거·보육·교육·돌봄·문화·의료의 필요(머무는 조건)"입니다.

'오는 이유'는 지역의 산업·고용·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반이고, '머무는 조건'은 주거·돌봄·교육·교통·문화·의료처럼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순서로 보면 사람을 오게 할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생애 단계를 지나면서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5. '머무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으로 충분한가

지역 인구 정책을 보면 출산 지원금, 주거비 지원, 청년문화사업, 만남지원사업, 보육 서비스, 각종 정착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정책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떠나는 이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낮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적고, 경력을 이어가기 어렵고, 배우자가 일할 곳도 부족한 지역이라면 보육과 주거, 문화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머무는 조건'을 개선하면 유출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유입의 동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역 인구정책이 이런 '머무는 조건'을 만드는 개별 사업에 너무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출산 지원금, 만남사업, 주거 지원, 보육사업 각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과 일자리라는 '오는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가하는 것이 지역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정책은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문제의 절반만 다루게 됩니다. 재정은 재정대로 소요가 됩니다. 요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경제적 기반과, 온 사람이 생애과정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생활기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6. 모든 지역이 '오는 이유'와 '머무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더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지역 인구 정책의 방향이 1) 산업과 고용을 만들어 사람을 오게 하고, 2) 주거·교육·보육·돌봄·교통·문화·의료를 갖추어 머물게 하는 것을 공히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지방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독자적인 산업 기반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세입과 행정력도 같이 줄어듭니다. 의료, 교육, 교통, 문화 같은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모든 지방정부는 청년을 유치하고, 출산을 늘리고, 인구를 유지하고,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더 갖추도록 요구받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 단계별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이 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이 비슷한 수준의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 지방정부가 각자 인구를 '쟁탈'하려 경쟁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넓은 생활권을 전제하면서 인접 지역 중 어느 곳을 어떤 기능의 거점으로 유지할 것인지, 즉 산업과 일자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의료·교육·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어느 생활권 단위에서 유지할 것인지, 행정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발표는 생애 단계별로 무엇이 사람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앞서, "무엇이 사람을 그 지역으로 오게 하는가"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지역이 '오는 이유'와 '머무는 조건'을 만들 수 없다면, 보다 광역적인 생활권의 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간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NOTE

Session 1 사람의 이동과 정주
: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 결과

토론 2

토론문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

1. 서론: 만남-양육-이동을 '권역 안 정착'으로 바꾸는 게 과제다

전남·광주(통합권역, 이하 전남광주)의 인구 문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3개의 발제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대목도 그 지점이다. 만남/결혼, 출산/양육, 이동/정주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어느 한 부분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동(유출, 재배치)하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광주는 도시고, 전남은 읍면부·소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권역이 됐다고 해서 생활권이 자동으로 통합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광주로 쏠리는 것 아니냐” 같은 걱정이 더 커진다. 그런데, 최근 이동을 보면,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광주는 순유출 -1,844명, 전남은 순유입 +601명으로 엇갈린다. 그런데 이걸 “전남이 좋아져서”라고만 해석하면 위험하다. 여전히 청년층은 유출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은 단기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2025년 출생아가 광주 6,507명, 전남 8,731명, 2026년 1~5월 누적이 광주 3,131명(+16.3%), 전남 4,200명(+15.3%) 이런 식이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늘었네, 끝”이 아니라, 이 증가가 권역 내 정착으로 이어지는지가 진짜 문제다. 그럼 발제 순서를 따라 토론을 이어가 보자.

2. 만남·결혼: '만남이 되게 하는 조건'이 없으면 성사도 이동으로 끝난다

발제 1은 만남을 지역이 제공하는 조건(기회 구조)로 본다. 도지역 읍면부에서 교제율이 18.2%로 낮은데도, 미교제자의 교제 의향은 37~42%로 지역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부분은 특히 전남에 해당된다.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애가 발생할 장소·시간·이동 여건이 없다는 것(혹은 있어도 비용이 너무 큰 것)이다.

만남 경로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발제 내용이 중요하다. 수도권은 학교·직장·동아리 같은 활동 기반 만남이 55.8%로 높고, 도지역 동부는 43.2%로 낮아진다. 대신 도지역 동부는 이웃·지인 소개(관계망) 43.6%가 커진다. 전남을 생각해 보면 “소개로 만나는 문화”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외부 유입자(타지 출신, 혁신도시/산단 인력, U·I턴)가 늘어나면, 관계망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외부자’가 된다. 발제에서도 비수도권 미혼이 토박이(잔류) 비중이 크고, 토박이 집단의 교제율·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청년 유입 정책을 말할 때, “유입” 이후의 관계망 진입(사회적 정착)을 어떻게 만들지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

전남광주에서 더 아픈 대목은 만남권(거리)이다. 발제에서 도지역 동부는 교제 상대가 동일 시군구에 머무는 비중이 높고,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는 12.6% 수준으로 낮게 제시된다. 반면 광역시는 같은 시도 안에서 이동해 만나는 비중이 더 높다. 전남에 그대로 대입하면, 시군 경계가 “행정”이 아니라 연애 비용이 된다. 주말에 만나려면 차가 있어야 하고, 이동 시간이 1~2시간씩 불고, 밤늦게 돌아오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연애 자체가 줄어든다.

여기서 발제가 던진 경고가 ‘성사의 역설’이다. 읍면부는 결혼 후에도 현 지역에 남겠다는 비율이 27.5%로 낮고, 교제 중 집단의 5년 내 이동 의향이 70.4%로 높게 나온다. 연애가 이동 사전 단계로 읽힐 여지가 있다. 지역에 적용하면, 전남 청년이 광주에서 만나 결혼하면 광주로 옮기거나, 반대로 광주에서 결혼한 커플이 수도권으로 가버리거나. 그러면 만남사업 성과(커플 수)는 좋아 보이는데, 권역 인구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전남광주 만남 및 결혼 정책은 “행사 많이”가 아니라, 생활권·일자리·주거를 같이 붙이는 것이 더 본질이다. 발제에서도 정착에 필요한 1순위는 일자리(41~52%)이고, 원격·유연 근무가 이주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여성 62.2% vs 남성 49.7%로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에서

청년 여성 정착을 말한다면, 축하금보다 경력 연속성(일자리 질)과 유연근무가 실제로 되는 일터를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3. 출산·양육: '괜찮아도 떠나는' 걸 어떻게 막을지(주거·돌봄·시간)

발제 2는 출산과 양육을 이동(주거 이동)과 같이 본다. 출산 전후 2년 기준으로 이주하지 않음이 67.5%이고, 도지역 읍면부는 이주하지 않음이 72.9%로 더 높다. 지역의 입장에서 "출산했다고 바로 이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게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금 버티다가 아이가 크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초등 전환기 등).

발제에서 이주의 제일 큰 이유는 더 큰 집이다(출산 전 이주 51.9%, 출산 후 40.0%). 그다음은 보육 지원, 부모 근처, 직장 근처, 주거비, 교육환경이다. 결국 양육 정책은 보육시설 숫자만 늘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면적), 시간(직주 근접), 돌봄(가족·공공)이 묶여야 한다.

발제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짚짚한 결과는 전략적 이탈이다. 양육환경 만족이 높은 집단에서 5년 내 이주 의향이 56.2%, 만족이 낮은 집단은 43.0%로 오히려 낮다. "불만족해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좋아도 떠나는" 집단이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이게 꽤 현실적일 수 있다. 광주나 전남 거점도시가 양육환경을 어느 정도 갖춰도, 더 큰 주거 사다리나 교육 기대, 혹은 맞벌이 커리어 경로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육 늘렸는데 왜 떠나지?" 같은 상황이 생긴다.

최근 출생아 수가 조금 늘었다는 보도(광주 2025년 6,507명/전남 8,731명, 2026년 1~5월 누적 증가)는 분명 반가운 신호다. 다만 이것 "정책 성공"이라고 빨리 말하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권역 안에서 초등기까지 남을 수 있는지, 그 경로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전남광주의 약한 고리는 아마도 주거 면적 사다리와 직주 근접이라고 본다. 즉 신혼 때는 버티다가, 아이 생기고 방이 필요해지면, 혹은 통근 시간이 감당이 안 되면 이동한다.

그래서 제언을 정리하면. 첫째, 신혼·영유아 가구가 권역 안에서 면적 사다리(작은 집→조금 큰 집)를 밟을 수 있게 공급·임대·금융을 묶여야 한다. 둘째, 발제가 말한 3세대 근접 거주는 전남광주에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시군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근접해야 한다. 조부모는 의료·이동이 되고, 부모는 일자리·보육이 되는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오래 간다. 셋째, 보육 인프라 확충만큼이나 통근 시간, 초등 돌봄 공백, 여성 경력 연속성을 신경 써야 "좋아도 떠나는" 걸 줄일 수 있다.

4. 중장년·정주: '이주 유치'보다 '연속성 유지'와 가족 근접을 제도화

발제 3은 중장년 이동을 은퇴 이주 같은 단순 그림으로 보지 말자고 한다. 정주 여건에서 교통·의료는 상대적으로 괜찮게 평가되지만, 주거 리모델링 지원(25.5%), 중장년 재취업 기회(27.9%)가 취약하다고 제시한다. 전남광주에서 중장년 정주를 논하면, 의료 접근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특히 전남 읍면부), 사실 장기 정주를 좌우하는 건 "집이 버티느냐(수선·개조)"와 "일·역할이 있느냐(재취업·사회참여)"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연속성이다. 은퇴 후 거주 희망에서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다. 이 말은 "전남이 은퇴 이주를 유치하면 된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동보다 현 생활권에서의 삶의 질을 원한다는 뜻이다. 전남광주는 통합 권역이니 더더욱, 멀리 보내기보다 권역 안에서 살기 편한 쪽으로 미세 이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족 근접은 더 직접적이다. 발제에서 부모 근처 이동 이유에 부모의 육아·가사 지원을 받기 위한 이동(26.5%)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노후에는 자녀와 동거보다 가까운 지역 별거(47.7%) 선호가 높다는 점은, 전남광주에서 중장년 정책이 곧 양육정책과 이어진다는 뜻이다. 조부모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주거 수선, 이동권, 의료 접근)이 만들어지면, 맞벌이 가구의 시간 압박이 줄고, 그게 양육기 이탈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 결론: "다핵 생활권 패키지" 말고는 답이 잘 안 보인다

전남광주에서 만남·출산·정주를 따로따로 정책으로 다루면 성과가 새기 쉽다. 발제가 말한 것처럼 만남이 성사돼도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양육환경이 좋아도 떠나는 집단이 있고, 중장년은 이동보다 연속성을 선호하며 가족 근접은 상호지원이다. 이걸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

결론은 좀 뻘하지만, 결국 생활권 단위의 패키지다. 만남은 생활권 교통·거점과 결합해야 하고, 결혼 성사 이후에는 신혼 주거·통근·일자리가 붙어야 한다. 출산·양육은 보육 인프라만이 아니라 주거 면적 사다리, 직주근접, 3세대 근접 거주(생활권 기준)가 같이 가야 한다. 중장년은 의료·교통뿐 아니라 주거 수선과 재취업(역할)을 핵심으로 두고, 가까운 거리 별거가 가능하도록 생활권 설계를 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이러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행정 통합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 정부의 확실한 재정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 요인을 인구 구조 개선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좌장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발표

지역기업 현장에서 본 일자리, 인재, 정주 여건

- ▶ 이정관 본부장(전남테크노파크)

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돌봄 공백과 B2B 민간 돌봄 서비스 사례

- ▶ 정지예 대표(맘편한세상)

지역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

- ▶ 국민 패널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 윤동열 교수(건국대학교)
- ▶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 김지수 연구위원(산업연구원)
- ▶ 고제이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발제 1

지역기업 현장에서 본 일자리, 인재, 정주 여건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본부장

지역기업 현장에서 본 일자리, 인재, 정주 여건

2026. 08. 27.

일도적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본부장)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전공: 환경시스템공학), 2006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교수, 2년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학과, 겸임교수, 2년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팀장, 9년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실장, 3년
現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본부장 (2018.0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기술거래유공(2021)
조달청장상/혁신스카우터 유공(2023)
전라남도도지사상/일자리, 청년창업, 기술지주, 벤처기업육성(4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지역산업육성(2025)

기술거래사/산업통상자원부(2011)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지도사/여성가족부(2006)
벤처펀드전문인력/중소벤처기업부(2025)
ESG지도사, 지식재산지도사 1급(2025)

現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위원
現 한국환경산업기술진흥원 자문위원
現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기술인증(NET) 자문위원
現 순천바이오헬스산업진흥원 이사
現 동아시아협력교류연구원 이사
現 전라남도 지역산업육성 자문위원
前 전남경찰청 지식재산정보위원

2

정주여건(定住與件)은 '정주'(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와 '여건'(주어진 조건)이 합쳐진 말로, 사람들이
한곳에 오래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갖춰진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의 생활 환경 조건을
뜻합니다.

3

CONTENTS

- I 수도권 일극체계 및 지역현황
- II 지역 정주여건 한계

- 4 -



I

수도권 일극구조 및 지역현황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독일, 일본의 대기업 본사 위치



- 6 -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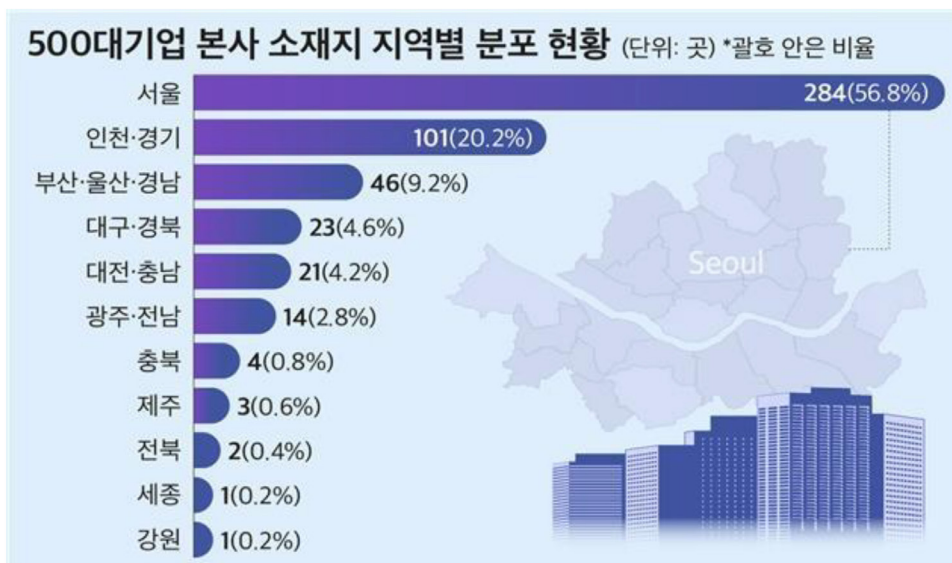
대한민국 지역별 대기업 본사 위치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대한민국 지역별 대기업 본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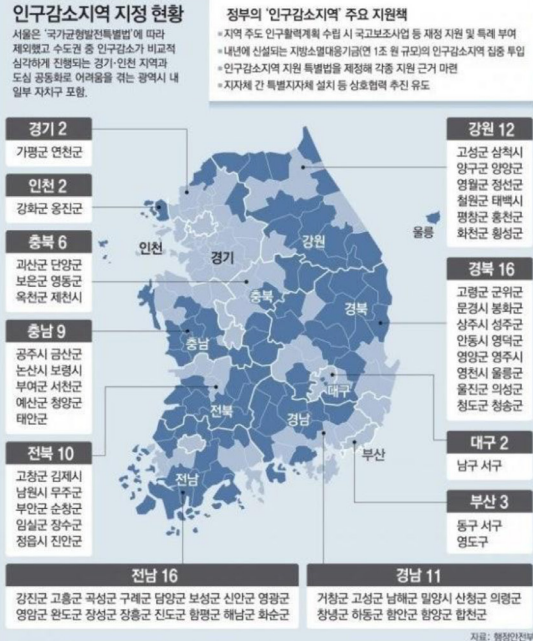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지방은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지역별 의료관련 현황(상급종합병원 지정)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GRDP 3위, 제조업 생산규모 4위, 인구 5위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출하액



지역내 총인구수



출처 : 2024년 국가데이터처(KOSIS), 지역소득통계, 제조업생산액, 지역별 인구수

- 13 -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면적 전국 3위, 재정규모 전국 3위, 산업단지 전국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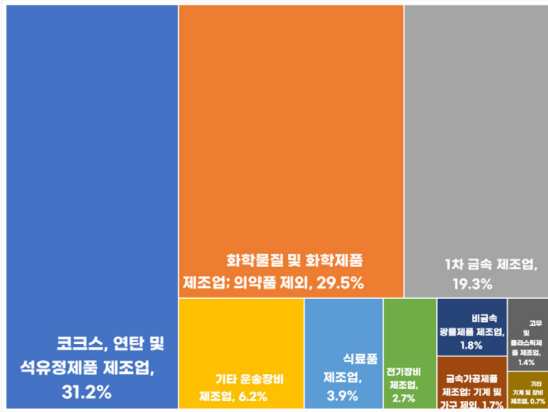
- 14 -

I. 수도권 일극 구조 및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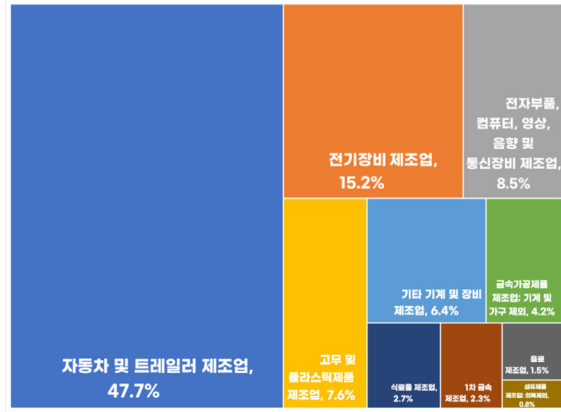


전남, 광주 의 경우 특정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전남 제조업 구조(2023년 생산액 10인 이상 기준)



광주 제조업 구조(2023년 생산액 10인 이상 기준)



출처 : 광업제조업조사, 2023년, 국가데이터처

- 15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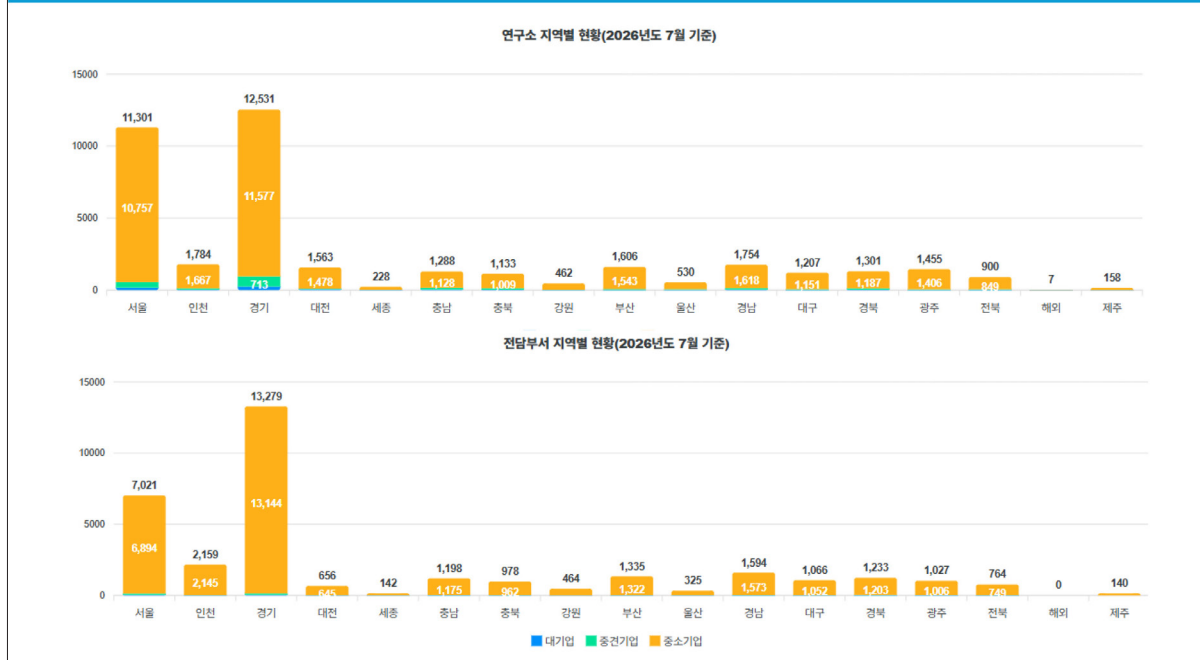
지역 정주여건 한계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지역별 현황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지역 인재 채용 한계로 일부 사무실 및 연구소 수도권 이전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일자리의 양”보다 “일자리의 구조” 한계

광주의 자동차산업은 2025년 기준 지역 전체 수출의 약 45.6%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임.
그런데 광주 자동차부품기업 130개사를 조사한 결과, 부족 인력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이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하는 원인도 임금 등 요구조건 불일치 33.8%,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 부족 33.1% 등으로 나타남.(출처 : 아시아 경제)

생산직은 지역에 있지만,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전략, IT, 글로벌 인력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감.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공장은 광양·여수·순천·나주·광주에 두더라도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소나 영업·기획 조직을 수도권에 별도로 두려는 유인**이 커짐.
결국 지역에는 제조현장이 남고, 고부가가치 의사결정 기능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기능의 공간적 분리**’가 발생함.

- 19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광양 사례는 “좋은 일자리의 힘”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

광양은 반대로 중요한 성공사례 : 포스코와 이차전지 소재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실제 청년 유입 효과가 나타남.
포스코퓨처엠 약 650명, 포스코HY클린메탈 약 200명,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약 230명 등의 고용이 발생한 시기에 광양에서는 **2022~2023년 28~35세 청년 약 1,600명이 유입됨** (출처 : 서울신문)

**좋은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질문에는 일단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음.**

기업 때문에 온 사람이 5년, 10년 뒤에도 지역에 머무를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주생태계의 문제**가 됨.

- 20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전남, 광주에서 사람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경력의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현재 회사가 맞지 않더라도 비슷한 산업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반도체 엔지니어라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IT 개발자는 대기업에서 플랫폼기업·스타트업으로, 연구원은 기업연구소에서 대학·출연연으로 이동할 수 있음. 반면 지역에서는 특정 기업을 퇴사하면 **동일 직종의 다음 직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청년 입장에서는 연봉 500만~1,000만 원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

“여기서 10년 뒤에도 내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른바 ‘Career Option, 경력 선택지’의 부족

전문인력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

- 21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배우자의 일자리 문제가 정착을 결정합니다.

지역기업의 기술자나 연구원이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문제가 달라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광양의 이차전지 기업에 취업했다고 가정하면 본인은 좋은 일자리를 확보했더라도 배우자가 금융·IT·디자인·연구·전문서비스 분야 종사자라면 광양 또는 인근에서 동등한 수준의 직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 발생함.

결국 가족은 선택해야 함.

- ① 부부가 주말부부로 살거나
- ② 한쪽이 경력을 포기하거나
- ③ 두 사람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임.

“근로자 한 명의 취업”=> “가구 단위의 정착”

- 22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여수, 광양의 산업 규모와 도시 기능 사이에 불균형입니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산업기반, 하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 주변 도시가 제공하는 **의료·교육·문화·상업·연구·전문서비스 기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공장은 세계적인데, 도시의 기능은 세계적인 인재가 선택할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고소득 엔지니어와 연구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단순히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부족함.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자녀 교육 선택권, 문화·공연·쇼핑, 국제교육, 배우자 취업, 전문 커뮤니티 등이 함께 필요함.

산단 조성과 **정주도시 조성**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음.

- 23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광주는 전남보다 도시 기능은 좋지만, 기업 본사와 고임금 직무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광주는 대학·대학병원·문화시설·상업시설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은 전남 시군보다 훨씬 좋은 편임

그런데 광주 청년 유출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음.

“살기는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없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본사, 금융, 플랫폼, 컨설팅, 대형 연구소, 콘텐츠, 전문서비스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광주는 **정주환경 부족**보다는 **‘직업 선택지 부족’** 문제가 더 크고, 전남은 **직업 선택지와 정주여건이 동시에 부족한 이중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4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대학에서 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경로도 약합니다.

지역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시기가 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 산업의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뽕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청년은 갈 기업이 없다고 함.”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개발·AI·자동화·설계·품질·글로벌 마케팅 역량과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사이의 미스매치가 존재하기 때문임.

광주 자동차 부품기업 조사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필요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33.1%임.

(출처 : 아시아경제)

- 25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지역 기업 자체의 임금, 브랜드 격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는 수도권 기업과 비교해 급여·복지·근무환경·기업 브랜드가 낮은 곳이 많음.

광주 자동차부품기업 조사에서도 **급여 등 지원자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청년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직무라면 수도권 기업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문화·교육·의료·경력기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경쟁하기 매우 어려움

“지역에 있으니까 낮은 임금을 감수하라.”

지역 중소기업도 스마트공장·AI·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생산성 향상이 임금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26 -

Ⅱ. 지역 정주여건 한계



전남,광주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은 분산됐지만 핵심 기능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 ” 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산업 정책은 오랫동안 **공장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집중 하였음.**
그러나 대기업의 본사, 전략기획, 금융, 연구개발, 글로벌 마케팅, 투자 의사결정 등 기능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음.
지역에서는 생산과 현장운영을 담당하고 수도권에서는 고임금·고학력 직무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됨.
지역에 제조업 투자를 늘려도 **화이트칼라 청년의 수도권 이동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움.**

“기업 이전 ” 이 아니라 기업 기능 이전 ”

- 27 -



- ☞ “지역소멸의 핵심은 일자리 부족만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경력·배우자 일자리·교육·의료·문화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연결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 ☞ 따라서 전남·광주가 추진해야 할 정책도 **산단 중심 기업유치에서 ‘산업+도시+대학+의료+교육’을 묶은 정주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28 -

NOTE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발제 2

**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돌봄 공백과
B2B 민간 돌봄 서비스 사례**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

제43회 인구포럼

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돌봄 공백과

B2B 민간 돌봄 서비스 사례

한국아이돌봄협회 회장 / (주)맘편한세상 대표
정지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육아정책 및 출생아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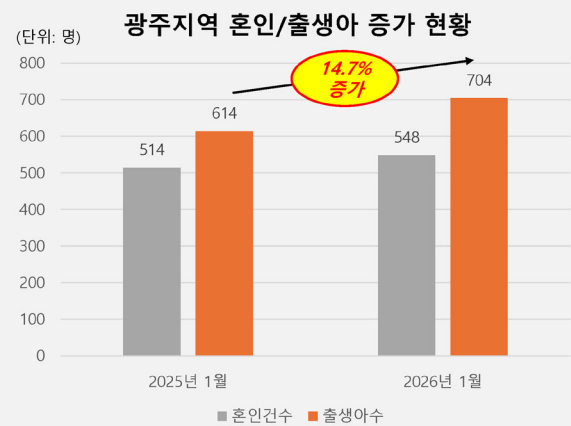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이키움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2.0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2.0



광주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 결혼 >
- 임신 >
- 출생 >
- 육아 >
- 일·생활 균형 >



기업이 이주하면 직원들도 같이 올까요?



새 근무지에서의
변경된
업무 프로세스
및
근무 환경
적합도 / 만족도

아이의
양육/성장환경
만족도

배우자의
커리어 개발
만족도

배우자의
여가 생활
만족도

안평명 ♥ 평택 안성 1위 망카체-평택만 안성만 고덕만 오산만 - 2025.04.11. 11:21.
평택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긴가요?
의사·간호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랑 다르게 병력이나 등·하원 시간 등등 등
하원 시간 맞추기 어려울 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해야 할거 같은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정하면 배도 매치가 되는데 중급하고 적정도 되고 급·심한데 배도...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

봉담 사람들 (지역현안카페) - 2024.11.21.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의사하고 아이돌봄 대기 신청을 해놓는데 아직은 대기중입니다ㅠㅠ 안산에서 거주할때는
2-3주내로 배로 매치가 되었는데, 화성은 지역 특성상 젊은 부부들이 많고 맞벌이가 많아
서 대기가 많다고요... 대기가 길어짐에 따라 부모님들은 애가 타요... 사실은 민간에서 잘...

구미명 수다방(명신,출산,육아,구미명들의 카페) - 2023.12.21.
인동으로 이사하는데 아이돌봄 대기할까요?
아이들 2살4살있어요

3

부모 임직원이 겪고 있는, 아이 키울 때 생기는 상황들



직장/업무 상황

- 회의, 시스템 점검, 월말 마감 기간으로 하원 픽업 어려움
- 야근, 주말 근무 발생 → 아이 맡길 곳 없음
- 급한 외부 미팅이 잡혀 돌봄 계획이 틀어짐
- 팀원 부재로 인한 인력 공백 → 아이 일정 변경 필요



방학/일상 공백

- 여름&겨울방학 중 일주일 돌봄 공백
- 건강 상의 이유로 재택 중에도, 아이가 계속 울어 집중 불가

“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배우자도 못 가고
중요한 시즌이라 갈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아동 질병

- 아이가 고열로 어린이집 등원 불가
- 콧물, 감기 증상으로 가정보육 권유
- 같은 반 아이 전염병(수족구 등) 발생 → 가정돌봄 필요



돌봄 제공자의 부재

- 시티님 가족행사로 결석
- 조부모님 병원 진료로 돌봄 불가

4

부모 임직원의 일생활균형을 돕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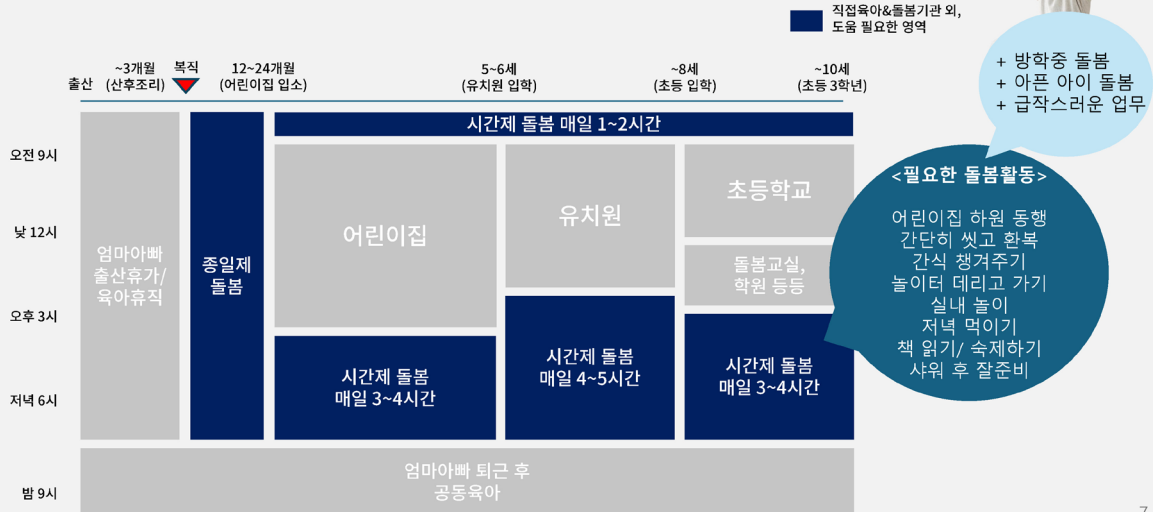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균형'을 도울 수 있는 방법



6

일하는 부모들은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지”를 10년간 고민합니다.

출산 직후 산후관리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 종일제 돌봄, 영유아 시기 시간제 돌봄, 초등시기 공백 돌봄까지 10년간의 돌봄 공백기에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 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7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아이돌봄 “대기”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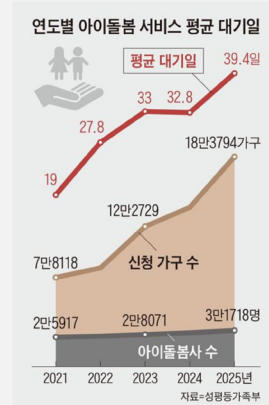
1.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심각 (전국 평균 200일)



- 혼인·출생률 증가세 반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2만6064개('25년 기준)로 5년 전인 '20년(3만5352개)과 비교해 **5년 만에 26% 넘게 폐원**
- '20년 어린이집 한 곳당 신규 원아 비율 평균 7.7명 대비, '25년 **9.7명으로 급증**
- '23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평균 대기 기간은 **197.8일** ('23년 육아정책연구소)
- 특히, 서울·강서·마포·성북·양천 등 13곳과 경기 광명·광주·성남·수원 등 13곳 **500일 초과**

2.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심각 (전국 평균 40일)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공공 활동인력)은 부족한 상황
- 수요(신청가구): 6.7만 가구('20) → 13.9만 가구('24년) → 18.4만 가구('25), **전년비 32% 증가**
- 공급(활동인력): 2.45만 명('20) → 2.96만 명('24) → 3.17만 명('25), **전년비 7% 증가**
- 그 결과 **평균 대기기간이 39.4일**로 증가하였고, 전국 1만 2천여 가구가 대기 중
- 구조적인 매칭 실패로 예산 불용 발생 → 예산을 배정해도 서비스로 전달되지 못하는 비효율 구조
- 매칭 실패에 따른 불용액 '25년 468억 원(불용률12.2%)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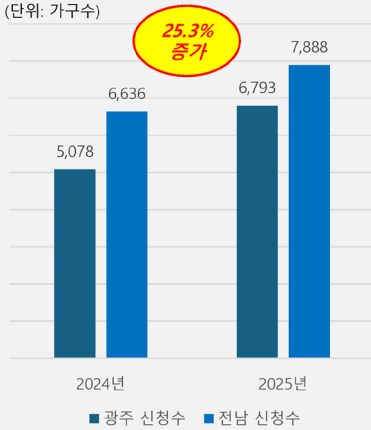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대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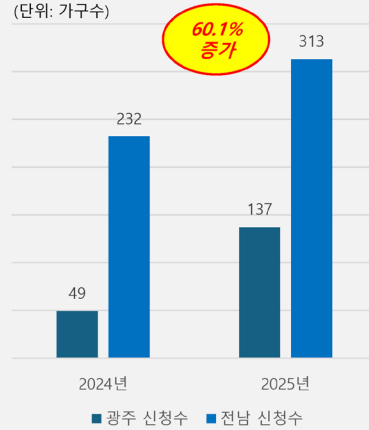
[광주전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현황]

(단위: 가구수)



[광주전남 아이돌봄서비스 대기현황]

(단위: 가구수)



9

근로자들의 아이돌봄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기업 지원 사례

기업의 핵심인재 근속관리 및 업무몰입 지원 니즈와, 육아기 직원의 일생활균형 니즈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계약하여 관리형 1:1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복지로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정부기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육아기 부모님들에게 지원하여 육아를 돕고 있습니다.

7만명 규모의 대기업부터 10명 규모의 작은 기업들까지
부모직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맘시터 비즈케어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맘시터
비즈케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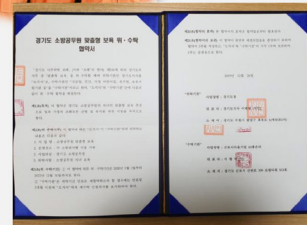
서울시/광주시/경기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사례

육아 지원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교대근무로 육아가 어려운 '소방공무원'까지
틈새돌봄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주시
소상공인 부모 위한
민간 아이돌봄지원 (*24.11~)

- '24.10 (주)맘편한세상 민간 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 서울시/광주시-KB그룹 업무협약 (사업금 지원)
- ✓ 소득기준 없이, 0~12세 이하 아이 양육
- ✓ 소상공인 가구 대상
- ✓ 매월 최대 60만원(아이1인 기준) 지원 (돌봄비 33% 지원)
- ✓ 서울 지역, 1천가구 지원 모집에 6,528가구 신청 (경쟁률 6.5:1)



12

일본 도쿄 어린이집 대기가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사례

도쿄시 「어린이집 대기가정 베이비시터 이용지원사업」

□ 도쿄도는 '18년부터, 어린이집 등에 입소 신청했으나 대기 판정을 받은 아동의 가정이 도 인증 민간 베이비시터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베이비시터 이용지원사업」을 8년째 운영 중

○ 지원 대상

- ① 어린이집 등 입소 신청 후 대기(입소보류) 판정을 받은 0~5세 아동의 보호자,
- ② 0세반 미신청 후 만1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보호자,
- ③ 야간보육이 필요한 보호자

○ 지원 내용: **아동이 어린이집 등에 입소할 때까지**, 도 인증 사업자 이용 시 1일 최대 8시간·월 160시간(또는 1일 11시간·월 22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자 실부담을 시간당 150엔 수준**(+시터 교통비 실비 정액 900엔)까지 경감 — 차액은 도·구시정촌 공비가 부담

○ 운영 구조: 이용자가 **인증 민간사업자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직접 계약 → 도가 공비부담분을 사업자에 지급, 자기부담 경감분은 거주 구시정촌이 별도 보조

○ **시설 재진입 유인 병행**: 본 사업 이용 실적이 익년도 어린이집 입소 신청 시 **가산점으로 반영**되어 입소 우선순위가 상승

※ 출처: 東京都福祉局 「ベビーシッター利用支援事業(ベビーシッター事業者連携型)」

해럴드경제 · 2018.01.06 · 네이버뉴스

어린이집 대란 **도쿄도, 月263만원 보조비용 지원** 특단 대책

소득과 상관없이 기준에 맞는 모든 부모가 지원 대상이다. 도쿄도는 1500명이새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이케 지사는 "고소득 가정 이 아니어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



KBS · 2017.01.05 · 네이버뉴스

일본 도쿄도, 보육사 월급보조·자녀 육아비 지원

보육사에게는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1개월에 최대 28만 엔(2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새해부터 보육사에게 매월 6천 엔(약 6만 원)을 새롭게 지급하기로 한 바 있어 도쿄도 보육사에게는 1인당 총 2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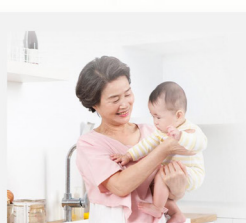
日 "보육사 모셔라"...월급보조에 자녀 육아비 280만원 지... 연합뉴스 · 2017.01.05 · 네이버뉴스



13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주하면, 부모 근로자들은 어떤 이득이 있는가?



14

전남광주 특별 '민간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정책(案)

전남광주특별자치시에서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필요한 때 바로, 비용부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만들어 정주 여건을 확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광주 특별 아이돌봄 지원 방안(예)>

1. 기업-지역 매칭 지원 2. 지역 지원(영세 기업 대상)

근로자 자부담 6,000원	근로자 자부담 6,000원
지역 지원 6,000원	지역 지원 12,000원
기업 지원 6,000원	

근로자 일상활동형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생산성 증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 기준 마련 (대상자, 지원규모 등)
- 복지 플랫폼 운영/관리
- 돌봄기관 선정 및 바우처 교부/관리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확대 및 발전

기존 아이돌봄 대기 문제 탈피
아이돌봄 부담 완화
일생활 균형 권리 증대

전남광주 소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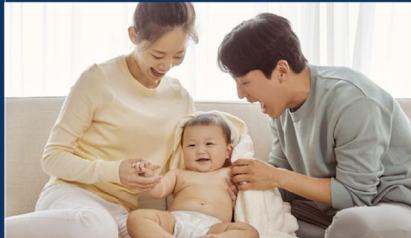
- 이용희망 근로자 사전 확인
-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
- 복지 기업부담금 지급

- 전남광주특별자치시 소재 기업 근로 & 거주 부모
- 기업/지역 바우처 외 금액 본인부담

아이돌봄 민간 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내역 관리 및 보고
- 부모 자기부담금 결제 관리
- 기업/지역 바우처 정산 요청

15



기업 근로자들의 육아만족도 관리가
정주요건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b2b@mfort.co.kr

NOTE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정책 제언 1

기업 유치에서 ‘정주^{定住}’로

: 기업·인재·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메가특구 전략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기업이 오면, 사람도 올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공간적 이동이 인구의 이동과 지역 정주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 (The Region)



수도권 (The Capital)

이전비용 낮추기에 치중한 정책

세제 감면, 입지 지원, 투자 보조금 등
기업의 초기 비용을 줄이는데 집중



핵심 기능의 분리

생산시설만 지방으로 이전
연구개발, 기획, 경영관리
등 핵심 기능과 인력
수도권 전류



정주 없는 단기 체류

핵심 인재가 가족은 이동없이
주중에만 지방에 머무르게 됨
지역 인구 증가 및 소비, 교육,
서비스 활성 효과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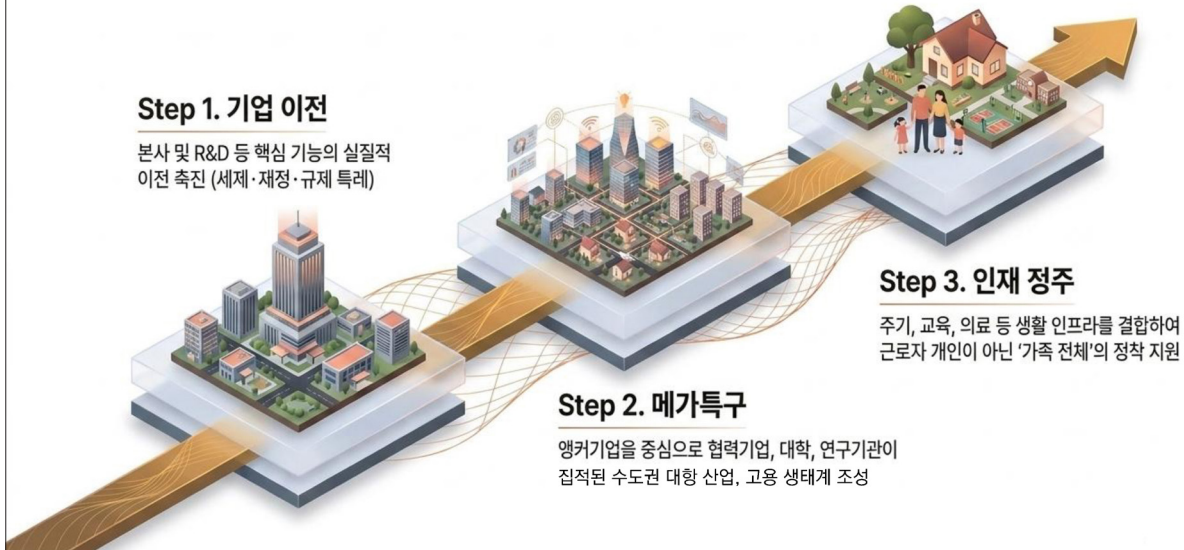


패러다임의 전환

정책의 최종 목표: 기업 유치 수 및 투자액 중심	정책의 최종 목표: 사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정착
핵심 인센티브: 이전 규모에 따른 획일적 보조금	핵심 인센티브: 고용 및 정주 성과에 연계된 차등 지원
공간적 대상: 개별 기업의 전국적 분산	공간적 대상: 메가특구 중심의 집적과 규모의 경제
최종 결과물: 주중 근무, 단기 체류자 양산	최종 결과물: 가족 단위 정주, 지역경제 선순환

기업의 공간적 이동에서 **‘사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정착’**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프레임: 선택하게 만드는 정책



[Step 1] 투자 규모에서 '고용과 정주' 중심의 성과연계형 지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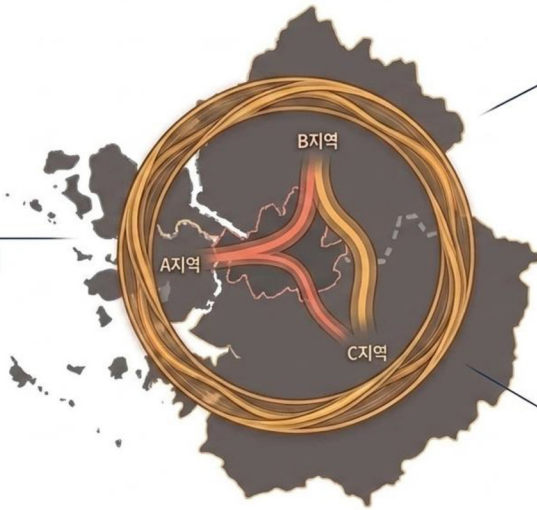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과 인재 정착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합니다.

[Step 2] 행정구역을 넘어선 ‘규모의 경제’: 광역경제권 메가특구

개별 시·도 경쟁 탈피

인구 50만, 100만 단위의 포개기식 산업정책으로는 거대한 수도권의 노동/산업 생태계에 대응 불가.



기능의 전략적 분담

모든 지역이 유사 산업을 중복 유치하는 것을 방지.
A지역(산업생산) - B지역(대학/연구기관)
- C지역(주거/문화)으로 기능을 분담.

하나의 생활·노동시장

광역교통망을 통해 복수의 시·도를 물리적으로 연결, 수도권에 필적하는 단일 경제권을 구축.

[Step 2]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완결된 일자리 생태계

순환하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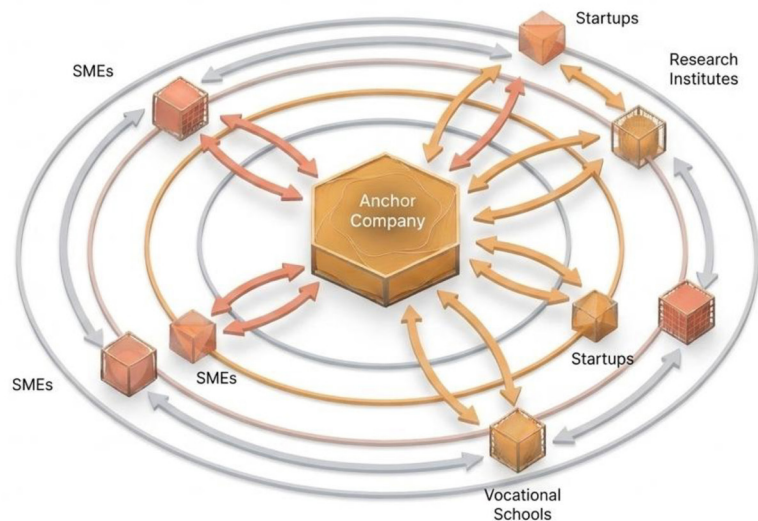
단일 대기업 유치로는 지속 불가능, 권역 내에서 거래와 인력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합니다.

동반 이전 및 공급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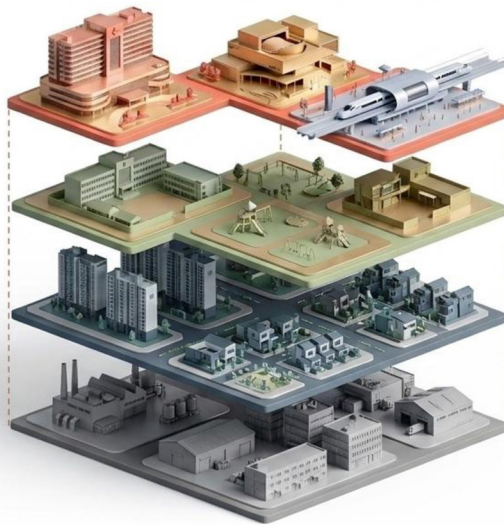
앵커기업 이전 시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전체로 파급효과 확산.

인력 풀림 방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복지, 경력개발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대기업으로만 인력이 쏠리는 현상 방지.



[Step 3] 일터에서 '가족의 삶터'로: 정주 인프라의 패키지화



의료·문화·교통
(종합병원, 문화시설, GTX급 교통)

돌봄·교육
(공동직장어린이집, 우수 학교)

주거
(주택 특별공급, 주거비 지원)

일자리
(공장/사무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아닌
'임직원 가족의 결정'입니다.

일자리-주거-교육-돌봄-의료-문화를
하나의 생활권 패키지로 묶어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정주를 유도하라.

일자리-주거-교육-돌봄-의료-문화를
하나의 생활권 패키지로 묶어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정주를 유도하라.

지역대학의 진화: 지역 경력사다리(Local Career Ladder) 구축



공동 교육 설계

지역 인재정책 없는 기업 이전은
사상누각입니다.
메가특구 내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이 밀착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식의 전환

청년에게 단순히 남아달라는
호소가 아닌,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경력을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개방형 노동시장 플랫폼

청년

첫 경력 형성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

경력보유여성

돌봄 인프라 안벽 연계,
재취업 경로 확대

중장년

산업 전환 대비
재교육 및 전직 기회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교육-취업-비자-정주
원스톱 연계

인구감소 시대, 메가특구는 전국과 해외에서
인재가 스스로 찾아와 정착하는 개방형 인재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거버넌스: 부처 간 칸막이를 깬 ‘공간 중심’ 역할 분담



[중앙정부] 거시적 환경 조성

-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 과감한 규제 완화
- 대규모 재정 및 세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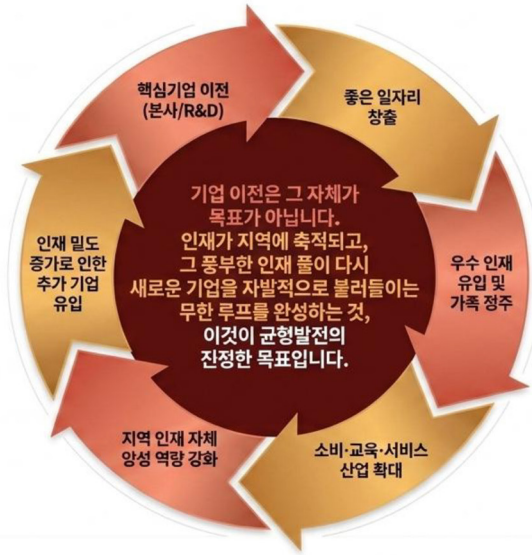
메가특구 패키지 정책 실행

[지방정부] 미시적 정주환경 구축

- 기업 맞춤형 유치 전략 기획
- 주거·교육·돌봄 밀착형 인프라 조성

고용, 주거, 산업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메가특구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패키지화해야 합니다.

지역 성장의 선순환: 스스로 팽창하는 메가특구 플라이휠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라는 낡은 질문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책적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과 사람이 ‘함께’ 올 수 있는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업, 인재, 지역이 하나의 생태계로 성장하는
 정주정책의 시작입니다.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정책 제언 2

지역 정주여건 관점에서 본 생애초기 인프라 개선 방안

이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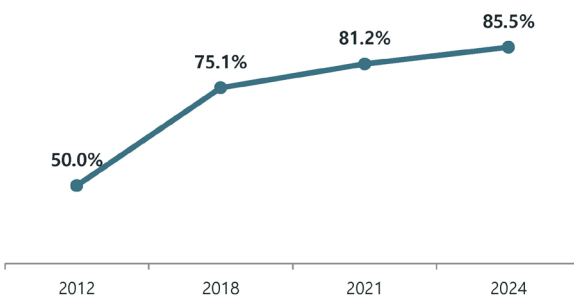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역 정주여건 관점에서 본 생애초기 인프라 개선 방안

이재희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현황

산후조리원 이용률 추이 10여 년간 +35.5%p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006년 도입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현재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이용률 **72.0%** 이재희(2026)

“제한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아니라, 출산가정 상당수가 이용하는 대표적 산후 돌봄 서비스로 확대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 면담

“두 서비스 모두 ‘선택적 이용’에서 ‘보편적 이용’으로 전환— 생애초기 서비스는 이제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핵심 기반

산후조리원 이용 특성



출산 병원 → 산후조리원
이동 자체는 대부분 1시간 이내

98.9%
1시간 이내 이용
(30분 이내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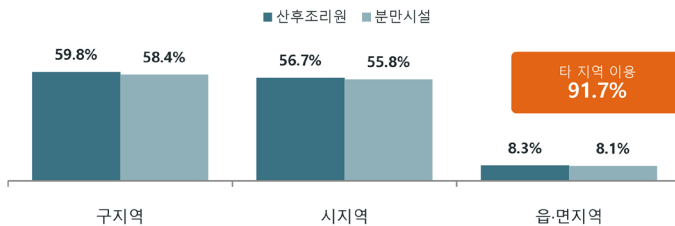
11분 vs 19.9분

평균 이동시간
도시 · 읍·면

3.5배

40분 초과 이동 비율
읍·면 16.7% / 도시 4.8%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한 비율



자료: 산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n=364)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율

11.1% 읍·면지역

구지역 1.2% 시지역 1.3%

약 9배 — 민간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용

읍·면 지역 산모는 거주지역 내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

산후조리원 현황



99

산후조리원 미설치 시군구
(민간·공공 포함, 2025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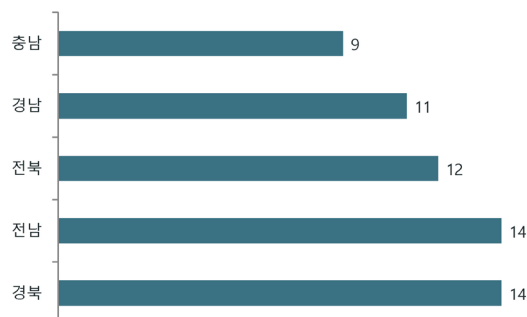
경북 14 · 전남 14 · 전북 12 · 경남 11 · 충남 9 — 비수도권 도 지역 집중

68곳

3층 취약 중첩 지역
미설치 × 인구감소 × 분만취약

미설치 시군구의 68.7% — 낳을 곳도, 조리할 곳도 없는 지역

시도별 산후조리원 미설치 시군구 (상위 5개 시도)



지역 사례

전남 — 산후조리 시설과 방문서비스의 이중공백



13곳

인구감소 × 분만취약 × 산후조리원 미설치
가 모두 중첩된 전남 시군구

10곳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 부재

분만취약지 등급: A, B, C

곡성군 B등급 제공기관 0개소	구례군 B등급 제공기관 0개소	담양군 C등급 제공기관 0개소	보성군 A등급 제공기관 0개소	신안군 A등급 제공기관 0개소
영광군 C등급 제공기관 0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예정)	영암군 C등급 제공기관 0개소	장성군 C등급 제공기관 0개소	진도군 A등급 제공기관 0개소	함평군 B등급 제공기관 0개소
고흥군 C등급	장흥군 B등급	화순군 C등급	제공기관은 있으나 사실상 공백 →	

전남 22개 시군구 중 13곳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부재 ·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해남·강진·완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 부재

시설형 서비스 공백이 방문형 서비스로 보완되지 않고 있음, 취약성이 동일지역 중첩

지역 유형별 대응 체계 — 거점형 시설 확충 + 방문형 서비스 강화



산후조리원 설치

- (미설치×인구감소×분만취약) 지역 설치지원
- 공영형·위탁형·복합거점형 등 지역 여건별 운영방식
- '모자건강·초기양육 복합지원센터'로 기능 확대 — 산후유을 상담·부모교육·모유수유·발달상담
- 유휴 공공자산 활용: 기부채납 시설·폐교·폐의료시설



트랙 2 · 방문형 서비스 강화

- 도서·벽지 등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방문서비스를 통한 연속적 산후·초기양육 지원
-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가산수당 및 이동시간 보상 현실화
- 가사지원과 건강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건강관리사의 전문성 강화
- 지역 내 건강관리사 확보와 안정적 배치를 위한 인력운영체계 개선



분만·산후조리·초기양육으로 이어지는 연속 지원체계(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연계)

입법 논의는 공공책임 확대와 민관협력 방향으로 전개 중



모자보건법 개정안 13건 2024. 7. ~ 2026. 7. 발의 · 공공책임 확대의 4개 축

민관협력 모델 —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실험 중

1 지역 공공책임 강화

인구규모·지역여건에 따른 지자체 설치 의무 논의 — 100만명당 1개소(김남근안) · 광역30만 이상(전용기안) · 30만 미만(김선민안)

2 국가 재정책임 명문화

설치비 2/3·운영비 1/2 보조(고민정안) ·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김도읍안) · 인구감소지역 우선 보조(박희승안)

3 공공자산 활용 확대

국유재산 무상대여(백혜련안) · 기부채납 및 휴·폐업 시설의 공공 전환(박용갑안)

4 민간 인프라의 공공적 활용

공공형 민간 산후조리원 지정·이용권 지급(박지혜안) · 민간 포함 취약계층 이용비 지원(김도읍안)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026년 시범 · 민간 5개소 공모 → 2027년 전역 확대 계획

2주 표준요금 390만원 산모 부담 250 + 서울시 지원 140

- 서울 거주 산모 대상 · 다자녀·한부모 50%, 저소득 100% 감면
- 참여 시설에 시설개선비 최대 5,000만원 지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2021~2024) — 종료 사례

우수 민간시설 지정·감영관리 장비 최대 3천만원 지원, 5→10개소 확대, 한시 승인 종료 후 2024.5 사업 종료 → 산후조리비 직접 지원으로 전환

※ 13건 모두 입법 완료 전(2026. 7. 기준) — 심사 과정에서 병합·수정 가능

정책 배경: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 491만원 (2025. 6.)

공공책임 강화와 민간 활용이 동시에 논의되는 전환기 — 기업 참여는 제도 변화에 맞춘 단계적 설계가 필요

기업 참여 4유형 — 즉시 실행형부터 제도 연계형까지



① 근로자 방문서비스 지원 실행형

이전·정착 근로자 가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및 추가서비스 지원

현행 제도 안에서 기업복지로 추진 가능



②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존 인프라 연계형

공공 운영기준을 충족한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해 근로자 이용료 일부 또는 차액 지원

공공형 지정·이용권 도입 논의(박지혜안)와 연계 가능



③ 산단 공동설치·공동이용 중장기 공동투자형

입주기업이 설치비를 공동 분담하고 지자체·전문기관이 운영 — 산업단지 정주 인프라로 조성

국고보조·국유재산 활용 논의(고민정·백혜련안 등)와 연계



④ 기부채납·유류자산 전환 지역상생형

특구·산단 개발의 공공기여 또는 유류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모자건강·초기양육 복합지원 거점 조성

기부채납·휴·폐업 시설 공공 전환 논의(박용갑안)와 연계

역할 분담 국가(제도·재정 기반) · 지자체(수요·부지·운영) · 기업(근로자 복지·공동투자·공공기여)

설계 원칙: 획일적 가격상한보다 지역 가격·취약도·시설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과 이용요금·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병행

NOTE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정책 제언 3

기업이 오면 청년이 머물까?

: 청년의 지역이동 특징과 지역별 정주환경 진단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이 오면 청년이 머물까? : 청년의 지역이동 특징과 지역별 정주환경 진단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6.8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김지수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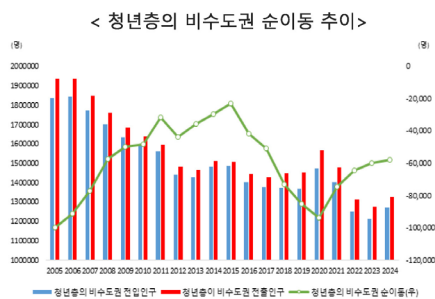
본 자료는 김지수 외(2025)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일-삶-락-연 기반의 청년친화지수와 정책방향" 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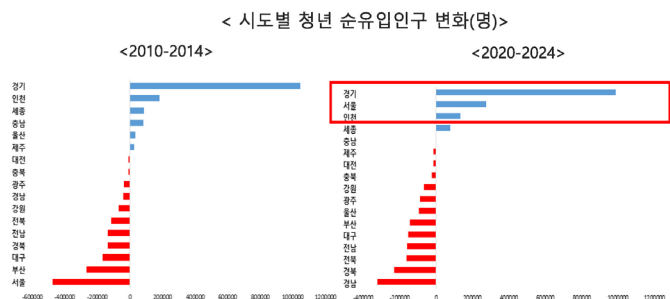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기업이 오면 청년이 머무는가?

- »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은 청년을 지역에 유입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 » 여전히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비수도권의 현실→ 일자리만으로는 지속가능성 한계
 - 청년들이 자주 떠나는 지역 이미지 → 추가적인 청년인구 유입 저해, 기업 투자 망설이는 악순환
- » 얼마나 많은 청년을 유입했는가 → 청년들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는가?



자료: 김지수 외(2025)



자료: 김지수 외(2025)

2 청년층 지역 이동의 주요 특징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청년들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세 명 중 한 명은 수도권으로 회귀

- 국가데이터처의 청년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미시패널데이터 구축 → 청년인구 이동의 동태적 특징 분석
- 분석기간 2015-2022년, 만19-39세 청년 대상
- (정착 패턴)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 후 수도권 정착 42.7% >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후 비수도권 정착 21.3%
- (회귀 패턴) 수도권으로 회귀 11.4% > 비수도권으로 회귀 6.4%
- 비수도권에 머문 기간 평균 1.6년에 불과

<청년인구의 이동패턴별 분포>

이동 패턴 구분				
패턴 1: 수도권 정착	비수도권 → 수도권 유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1회 이동 후 유지(정착)	패턴 1: 수도권 정착	42.7
패턴 2: 비수도권 정착	수도권 → 비수도권 유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1회 이동 후 유지(정착)	패턴 2: 비수도권 정착	21.3
패턴 3: 수도권 회귀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3년 이상 정주(회귀)	패턴 3: 수도권 회귀	11.4
패턴 4: 비수도권 회귀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비수도권으로 돌아와 3년 이상 정주(회귀)	패턴 4: 비수도권 회귀	6.4
패턴 5: 이동 반복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반복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넘나드는 이동 반복		

자료: 김지수 외(2026)

주: 분석기간 중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계를 넘는 이동을 한 청년 대상 분석결과임

KIET 산업연구원

3

2 청년층 지역 이동의 주요 특징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청년들

<수도권 회귀 패턴의 시도간 이행계적>

회귀 경로 (상위 20개)	관측치	비중	평균 거주기간
경기→충남→경기	11,559	69	1.70
경기→강원→경기	7,718	46	1.85
경기→충북→경기	6,700	40	1.69
서울→강원→서울	5,822	35	1.66
서울→충남→서울	5,432	33	1.61
서울→대전→서울	4,085	25	1.77
경기→충북→경기	4,084	25	1.63
경기→경북→경기	3,944	24	1.90
경기→대전→경기	3,893	23	1.91
서울→경북→서울	3,684	22	1.72
경기→전북→경기	3,643	22	1.85
서울→전북→서울	3,223	19	1.34
서울→경남→서울	3,058	18	1.33
서울→부산→서울	3,030	18	1.30
서울→대구→서울	2,390	14	2.00
경기→경남→경기	2,309	14	1.00
인천→충남→인천	2,307	14	1.39
경기→전남→경기	2,257	14	1.00
서울→전남→서울	2,236	13	1.47
서울→광주→서울	2,051	12	1.00

<비수도권 회귀 패턴의 시도간 이행계적>

회귀 경로 (상위 20개)	관측치	비중	평균 거주기간
충남→경기→충남	2,986	32	2.21
부산→서울→부산	2,815	30	2.10
강원→경기→강원	2,510	27	2.13
강원→서울→강원	2,227	24	2.58
경남→서울→경남	2,186	24	2.11
충남→서울→충남	2,090	23	2.57
대전→서울→대전	1,993	22	2.18
전북→서울→전북	1,952	21	2.51
전북→경기→전북	1,938	21	2.70
충북→경기→충북	1,874	20	2.78
부산→경기→부산	1,840	20	2.20
대구→서울→대구	1,818	20	2.32
경북→경기→경북	1,771	19	2.79
대전→경기→대전	1,656	18	2.66
경남→경기→경남	1,650	18	3.00
충북→서울→충북	1,649	18	2.66
경북→서울→경북	1,590	17	2.51
광주→서울→광주	1,473	16	3.00
광주→경기→광주	1,356	15	3.00
전남→경기→전남	1,275	14	3.00

자료: 김지수 외(2025)

주: 각 회귀패턴 중 빈도수 기준 상위 20개의 시도별 이행계적 표시

KIET 산업연구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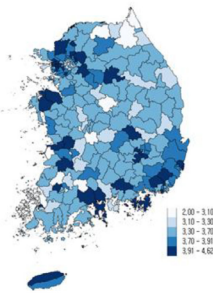
2 청년층 지역 이동의 주요 특징

평균 거주기간은 90년대생, 임시직에서 낮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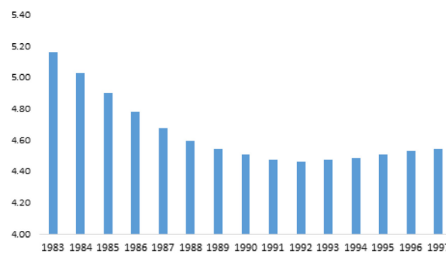
»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층의 거주 기간은 시군구 평균 약 3.6년

- (지역)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낮은 경향 (인천 용진군, 강원 고성군, 충북 괴산군 등)
- (연령) 80년대생에서 평균 거주기간 높은 반면, 90년대생 이후로 올수록 평균 거주기간 짧아져
- (고용형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임시직에서 평균 거주기간 가장 낮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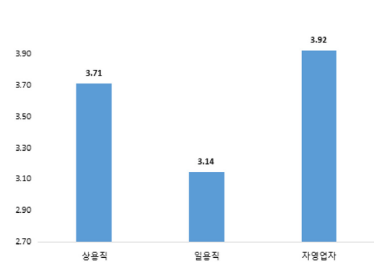
<시군구별 평균 거주기간>



<출생연도별 평균 거주기간>



<고용형태별 평균 거주기간>



KIET 산업연구원 자료: 김지수 외(2025)

5

3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

어떤 지역환경에서 청년들은 오래 머물까?

» 청년의 지역 정착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주환경과 사회적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청년들이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일(Work), 삶(Life), 락(Fun), 연(Engagement)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

- 일(Work) :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초기 동력이자 출발점
- 삶(Life) : 일 단계에서 유입된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전환점, 안정적 주거공간과 생활 인프라(교통·의료·교육 등)를 충족시키는 단계
- 락(Fun) : 정서적 만족과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지역을 '살아갈 만한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적·사회적 요소
- 연(Engagement) : 지역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유대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에 뿌리내리는 단계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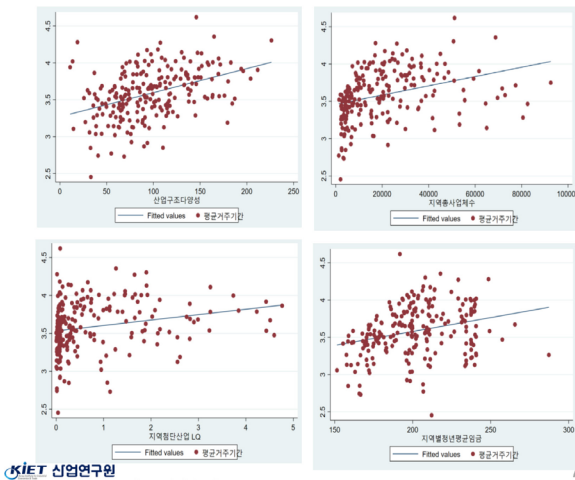
6

3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산업구조

» 일: 양질의 일자리

- 지역이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수록(산업구조 다양성), 일자리 기회가 많을수록(사업체 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을수록(첨단산업 집적, 평균 임금) 청년의 평균 거주기간에 긍정적



KIET 산업연구원

자료: 김지수 외(2025)

“수도권에 있다가 경북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IT 회사로 가고 싶어서 (경북에서) 취업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관련 분야 회사**가 많이 없어서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 김00, 20대

“직장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서울의 장점**인거 같아요.” - 전00,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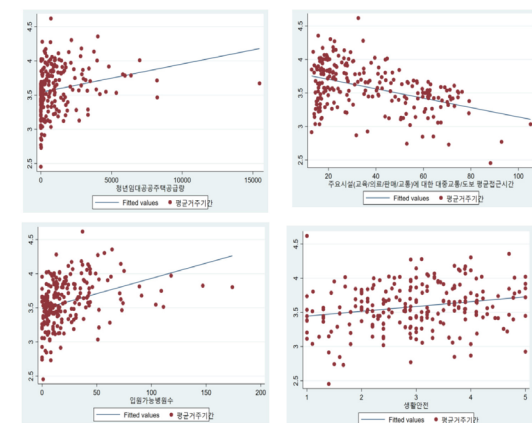
“서울로 간 친구들 말로는 수도권은 **경험의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 김00, 30대

3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

안정적 주거 공급과 교통·의료 인프라

» 삶: 주거 및 생활인프라

- 청년층 대상의 안정적 주택, 대중교통 인프라, 중대형 의료 시설 등은 청년의 평균 거주기간에 긍정적



자료: 김지수 외(2025)

KIET 산업연구원

“지금은 남편 직장 때문에 여수에 살고 있지만, 애들이 크면 **교육 때문**이라도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문00, 30대

“버스는 주로 읍 단위에서만 다니다보니 실질적으로 **자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비롯해 인근 대부분의 회사들은 취직할 때 보통 자차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 강00,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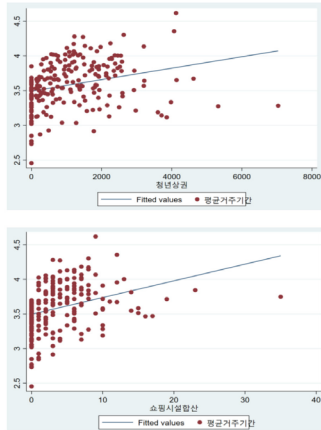
“원주에 잠시 살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아플 때**예요. 병원이 너무 적고 큰 병원도 없어서 너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 남00, 20대

3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

청년들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기회·인프라

» 락: 문화·여가 인프라

- 청년상권 및 쇼핑시설은 청년의 거주기간에 긍정적



“울산에서 잠시 근무했었는데, 거기는 비교적 대기업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인프라나 놀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냥 일터만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 조00, 30대

“제주도로 취업을 해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일단 배송이 너무 느리고 주변에 마트나 백화점이 없어요. 회사가 맞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배송이나 쇼핑인프라가 없다는 것도 지역을 떠난 이유 중 꽤 컸다고 생각합니다.” - 이00,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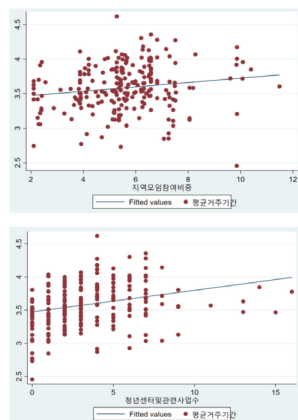
“문화적인 환경은 서울이 지방보다 1-2년 정도 빠른 거 같아요. 대구에서는 1년 뒤거나 할 팝업스토어나 전시회가 서울에서는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 권00, 20대

3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

지역내 소속감과 참여 기회

» 연: 정책적 소통 및 지역과의 관계

- 지역모임에 대한 참여도나, 청년을 위한 공간과 정책은 청년들의 평균 거주기간에 긍정적
- 지역이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만족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



“지역에서의 소모임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거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 지역에 적응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거 같아요.” - 전00, 30대

“처음에 부산에 온 건 일자리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너무 좋아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정이 있고 타지 사람을 오히려 더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서울에 비슷한 일자리가 있어도 딱히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허00, 30대

“충주에서 잠시 근무했었는데 거기는 지역사회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직장 내에서도 대부분 형, 동생,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여서 지역에 적응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 강 00, 30대

3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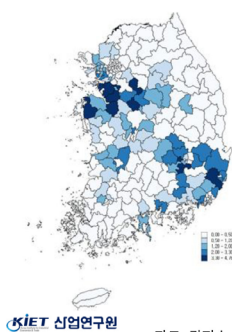
정주 환경에 대한 지역 간 편차 높아

»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주하기 위한 청년들의 요구는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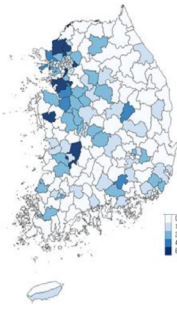
-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풍부한 문화 경험의 가능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해
-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 생활 안정과 문화적 만족을 동시에 누리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

» 좋은 일자리 및 정주여건에 대한 지역 간 편차는 여전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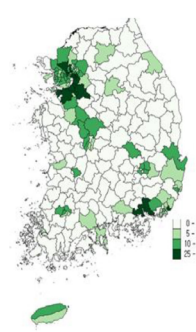
<첨단산업의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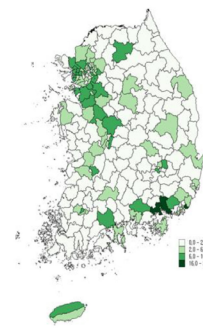
<청년 백명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전국 스타벅스 분포로 본 청년 상권>



<백화점 및 대형마트>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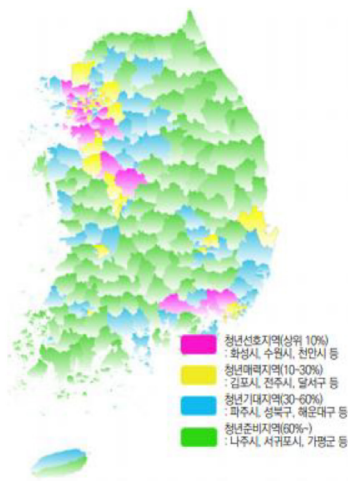
자료: 김지수 외(2025)

11

4 청년 정주환경의 지역별 진단

청년친화지수를 통한 지역별 청년 정주환경 진단

» (청년친화지수) 지역내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일),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며(삶), 문화적 활력(락)과 사회적 관계망(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



KIET 산업연구원

자료: 김지수 외(2025)

부문	상위 10개지역
종합	화성시, 수원시, 천안시, 중구, 안산시, 성남시, 시흥시, 부천시, 미추홀구, 강남구
일	천안시, 안산시, 화성시, 진주시, 성남시, 김해시, 시흥시, 창원시, 수원시, 청주시
삶	수원시, 중구(서울), 광명시, 중구(대구), 미추홀구, 동대문구, 부천시, 동래구, 수성구, 강남구
락	중구(서울), 중구(부산), 중구(대구), 종로구, 구로구, 광진구,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연	영광군, 중구(부산), 서구(대전), 군포시, 거제시, 부산진구, 무안군, 창원시, 노원구, 서구(광주)

12

4 청년 정주환경의 지역별 진단

일자리가 있어도 떠난다, 경유지가 된 산업도시의 역설

» 청년친화지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의 전국 대비 평균을 기준으로 4개 유형화

-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소 파악 →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지역별 차별화 접근 가능

<청년 경유지(Transit Zone)> · 일 ↑, 삶-락 ↓, 연 ↓ · 일자리 기반은 있지만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장기거주 제한적 → 산업 기반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청년정주환경 조성 ·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전통 제조업 산업도시	<청년 정착지(Settlement Zone)> · 일 ↑, 삶-락 ↑, 연 ↑ · 일자리와 생활·문화 기반 우수 → 성공모델 공유 통한 정책사례 확산 · 경기 화성, 경기 수원, 충남 천안, 서울 중구, 경기 안산,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지역 중심
<청년 유출지(Departure Zone)> · 일 ↓, 삶-락 ↓, 연 ↑ · 경제적 기회와 사회문화 인프라 부족 → 지역문제 해결형 일자리 확충 통해 청년유입 유도,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단계적 정착 유도 · 전남 나주, 제주 서귀포시, 충남 홍성 등 비수도권 소규모 지역 중심	<청년 정착유보지(Hesitation Zone)> · 일 ↓, 삶-락 ↑, 연 ↑ · 생활·문화 기반 대비 고용 기반이 취약 → 문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유입 요인 강화 · 서울 성북구, 부산 중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 등

자료: 김지수 외(2025)

5 지역 정책을 위한 정책 제언

①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삶-락-연의 통합정책 설계 필요

»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 (일-삶 연계) 청년 경유지형은 경제적 기회 제공하지만 주거 안정성, 문화여가 인프라 등이 취약 → 직주근접형 정주환경 개선
 - 전통 제조업 산업도시가 대표적 예
 -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라스트마일 교통수단 강화
 - 배후도시 고려한 문화·주거시설 공급, 주거-고용 연계형 인센티브 등
- (일-락 연계) 청년 정착유보지형은 생활·문화 기반은 양호하나 일자리가 취약해 정착을 망설이는 지역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자원을 고려한 전략적 기업 유치·창업활동 지원
 - 지역 브랜드화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일-연 연계) 청년 유출지형은 지역 간 소통연대는 우수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경제적 기회나 사회문화 인프라 취약 → 지역사회 연계형 일자리 창출
 -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기업유치 지원
 - 청년들의 창의적 방식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일자리 창출 효과

5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② 지역에서 생애설계 할 수 있는 두터운 노동시장

»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하나의 일자리가 아닌 지역 안에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두터운 노동시장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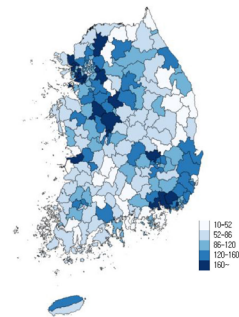
- 일부 기업 1-2개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선택의 폭 제한적, 퇴사가 곧 지역이탈 의미
 - 수도권 회귀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노동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회귀 경향 높아(서울권, 경기남부권 등)
- 기업 이전 추진 시, 협력업체·연구기관·전문서비스 등이 함께 유입·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지역산업구조의 다양성 제고

<회귀지역의 구분>

	수도권 회귀패턴	비수도권 회귀패턴
출발 지역과 동일/인근 지역 회귀	71	51.8
- 동일 시군구	39.9	45.6
- 동일 노동시장권	31.1	6.2
출발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회귀	29	48.2

자료: 김지수 외(2025)

<산업구조다양성지수 분포>



자료: 김지수 외(2025)

감사합니다.

NOTE

Session 2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
: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정주의 조건

정책 제언 4

기업이 오면, 사람은 머무는가?

: 기업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 지역 정주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이 오면, 사람은 머무는가?

기업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 지역 정주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26.8.27(목)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기업의 이동, 사람의 이동

Part.2

기업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 혜택의 귀속

Part.3

노르웨이 북부, 인구감소지역 정주 패키지

Part.4

정책 제안 — 기업에서 기업과 근로자, 가족까지

기업의 이동, 사람의 이동

기업 이전은 사업장의 이동이지만,
지역 정주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기반 이동이다.

기업
사업장의 이동

사람
생활기반의 이동

질문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근로자와 가족도 함께 이동해 그 지역에 계속 머무는가?

일자리가 있어도

경력을 이어갈 다른 기업이 부족하면 이동은 일시적일 수 있음.

가족이 함께 오려면

교육·의료·돌봄이 부족하면 가족은 수도권에 남을 수 있음

세제라는 수단

이전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거주 선택에 영향을 줌

3

기업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 혜택의 귀속

표 1. 주요 기업 지방이전 세제지원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주요 내용
국세 감면 조특법 §63, §63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시설 전부 이전, 수도권에 3년 이상 둔 본사의 이전	이전 공장·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100% 감면 5~10년, 이후 50% 감면 3~5년
지방세 · 이전 부동산 지특법 §79, §80	대도시 본점·주사무소·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후 3년간 50% 감감,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 · 기회발전특구 지특법 §80의2	수도권 본사·공장을 폐쇄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취득세 50% 감감, 재산세 5년 면제 —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 가능
지방세 · 인구감소지역 (이전 요건 없음) 지특법 §75의5 등	창업·사업장 신설, 지역주민 고용,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주민 1년 이상 상시고용 시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공제, 사원용 주택 취득세 50% 감감

주: 감면기간은 이전지역과 기업 요건에 따라 다름. 지특법 §79-§80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7. 12. 31.까지 취득분에 적용.

별도 아동·가족 지원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아동수당(수도권 10만 원 ~ 인구감소지역 12만 원), 기업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운영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4

기업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 혜택의 귀속

세제지원 혜택의 귀속 주체와 최근 변화

기업에 귀속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이전기업

취득세 · 재산세 감면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

지역주민 고용공제

→ 고용한 기업

사원용 주택 취득세 감면

→ 주택을 취득한 기업

이전 근로자에 귀속

해당 없음

민간 이전기업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가족의 양육·교육·생활비를 세제로 지속 지원하는 일반 제도는 확인되지 않음

월 20만 원 이주수당 비과세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한정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이전기업 근로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최대 월 50만 원), 2027년 시행 목표

현재 개편안 단계
법령 개정·국회 심의 필요

5

노르웨이 북부, 인구감소지역 정주 패키지

핀마르크-노르드트롬스 집중지원구역 (Innsatssonen i Finnmark og Nord-Troms)



“북부 지역을 거주하고, 일하고, 기업활동을 하기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1990년~

과거 특별조치구역(Tiltakssonen)
현재까지 운영

25개 지자체

북극권 핀마르크 18개 전체
+ 노르드트롬스 7개

약 70억 NOK

2026년 투입 규모
이 중 약 3분의 1이 개인 대상

1990년대 이후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공공서비스 유지와 지역경제 존립이 위협
⇒노르웨이 정부는 사람을 오게 하고 머물게 하는 것 자체를 정책목표로 삼아 1990년 이 지역을 특별조치구역으로 지정하고, 청년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유입 및 노동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

6

노르웨이 북부, 인구감소지역 정주 패키지

표 2. 핀마르크-노르드트롬스 지원제도 (2026년)

구분	대상 (적용 요건)	2026년 주요 지원
기업	구역 내 사업체 구역 안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원칙적 면제, 사업용 전력소비세 경감
개인·가구	지역 거주자 이전 여부 무관·실제 거주가 기준	일반소득세율 18.5% (일반지역 22%), 핀마르크 특별공제 최대 NOK 45,000 (약 670만 원)
	학자금대출 보유 졸업생 12개월 연속 거주 + 50%(반월) 이상 고용	학자금대출 연간 최대 NOK 60,000(약 890만 원) 탕감 — 매년 반복 적용
	초등학교 교사 인력난이 심한 직역에 대한 추가 우대	일반 탕감에 연 NOK 20,000 추가 (합계 최대 80,000, 약 1,190만 원)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와 아동이 함께 구역 내에 거주	아동수당 보충금 월 NOK 512(약 7만 6천 원) — 일반 2,012 → 2,524 (약 38만 원)
	영유아 자녀 가구 구역 내 보육시설 이용	종일보육 부모부담 0원 — 일반지역 보육료 대비 자녀 1명당 연 NOK 45,000(약 670만 원) 절감
	모든 가구 구역 내 가정용 전력 사용	가정용 전력소비세 면제

자료: 노르웨이 지방정부부·재무부·학자금지원청 자료.
원화는 1 NOK = 149원(2026. 8. 21. 기준) 환산 개략치로, 물가·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환산임.

고용비용 설계의 차이

한국·법인세 감면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혜택이 실현됨

노르웨이·사회보장기여금 면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
비용이 즉시 낮아짐

타 지역 부담률 임금의 5.1~14.1% → 구역 내 면제

취업 → 이주 → 양육 → 계속 거주
각 단계의 비용을 함께 낮추는 구조

최근 변화 — 노진세 우대는 축소, 거주 기준 공제는 확대
(핀마르크 특별공제 2023년 20,550 → 2026년 45,000 NOK)

7

정책 제안 — 기업에서 기업과 근로자, 가족까지

표 4. 기업 지방이전 지원에서 정주 패키지로

지원을 받는 기준을 '옮겼는가'에서 '살고 있는가'로 바꾸는 것

현재 지원구조	보완 방향
기업의 공장·본사 이전 중심	기업 이전과 근로자·가족의 실제 거주를 연계
기업 단위 세제혜택	이전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공제/저율과세 부여 가능성 검토
이주수당 비과세 (이전 시점 1회성)	거주 기간 기준의 지속적 공제로 확장
기업 이전과 분리 운영되는 아동·가족 지원	아동수당·보육·교육·주거지원을 같은 지역 단위에서 연계

설계 조건: 12개월 연속 거주·최소 50% 고용 유지·사후 신청 — 노르웨이 학자금 탕감 요건 참고. 단순 주소 이전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몰기한과 효과평가를 함께 설계하고, 성과평가는 기업 이전뿐 아니라 근로자 전입·가족 동반이동·정주기간을 함께 측정

기업을 옮기는 정책과 사람을 머물게 하는 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재편될 필요

8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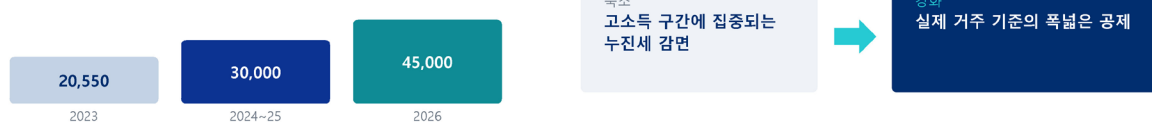


[부록] 노르웨이 개인소득세 지원의 변화

표 3. 종전과 현재의 세제지원

구분	기존 제도	현재 제도 (2026년)
일반소득세율	집중지원구역 18.5%, 기타 지역 22%	유지
핀마르크 특별공제	2023년 최대 NOK 20,550	2024~25년 30,000 → 2026년 45,000
누진세 3단계	구역 거주자에게 전국보다 약 2%p 낮은 세율	2024년 소득연도부터 전국과 동일
지원구조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누진세율 우대의 혜택이 큰 구조	누진세율 우대 폐지, 거주 기준 특별공제 확대

핀마르크 특별공제 한도 (NOK)



2025년 45,000 NOK = 약 670만 원 (1 NOK = 149원, 2026. 8. 21. 기준)

축소
고소득 구간에 집중되는
누진세 감면



강화
실제 거주 기준의 폭넓은 공제

제43회 인구포럼

떠나는 이유
머무는 조건

인구이동과 정주 여건으로 본
지역 인구정책의 재설계

